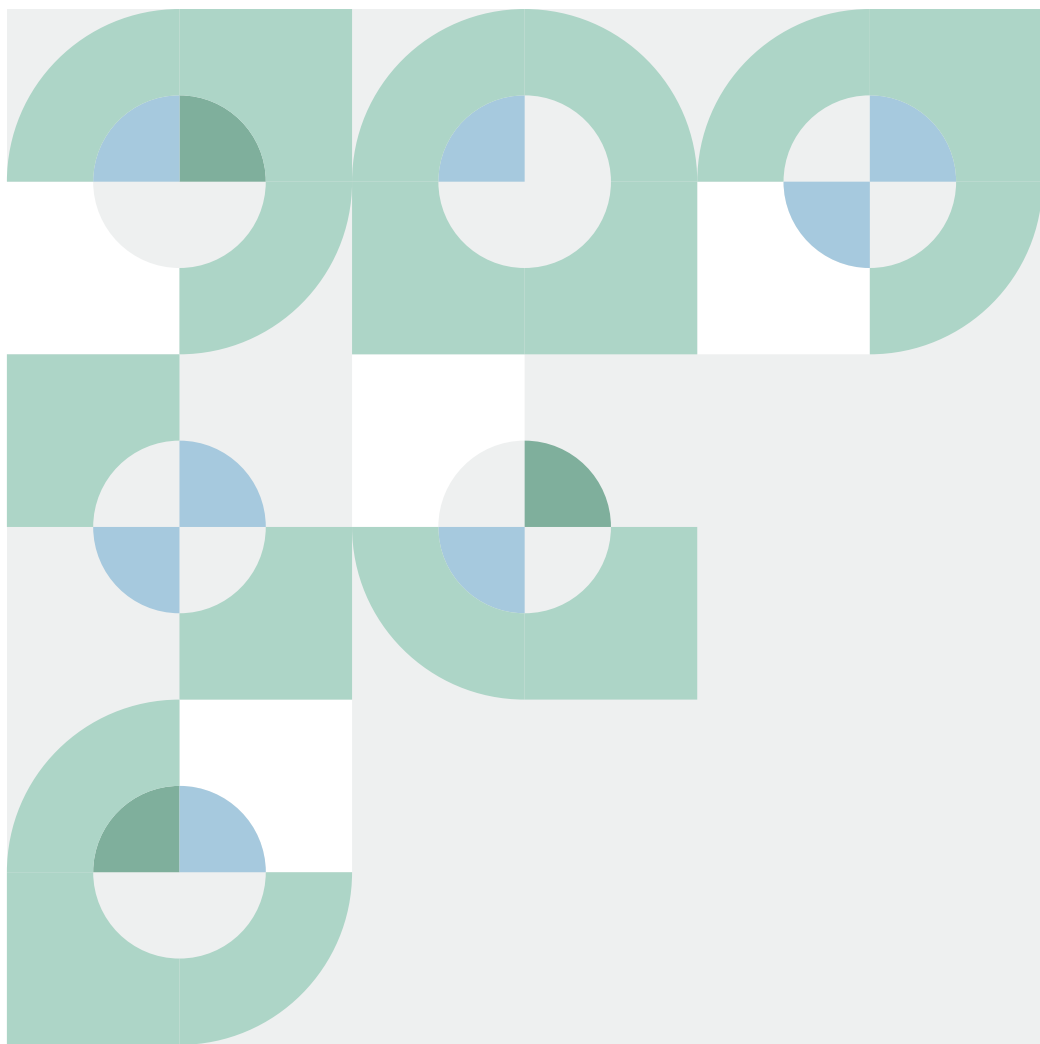


그린핀테크(Green FinTech)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2025.4

서정호



그린핀테크(Green FinTech)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서정호*

*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mail: jhsuh@kif.re.kr
보고서를 완성하기까지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백기홍 연구원과 홍찬우 연구원, 그리고 유용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보고서의 오류는 모두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Executive Summary

그간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목표 설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및 시행, 산업별 맞춤형 전략 수립 등의 실행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과는 달리, 금융 분야에서 기후리스크 관련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핀테크(Green FinTech)'는 아직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린핀테크는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기술'로 정의할 수 있는데, 녹색 데이터의 생성 및 보고, 녹색 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 녹색 금융상품 플랫폼, 디지털 녹색자산 솔루션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운영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산출·보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린핀테크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린핀테크의 참여가 늘어나면 금융배출량 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그린핀테크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 이들을 예시로 반영하거나,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여 사전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면 이들에 대한 투자나 금융연관업종 지정이 수월해질 것이다. 셋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정부 주도의 녹색금융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녹색금융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필요시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린핀테크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면, 그린핀테크 육성 차원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금융당국-그린핀테크-기업-금융회사'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 금융의 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발표되는 시점에서 그린핀테크 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CONTENTS

요약

I	논의의 배경	1
---	--------	---

II	그린핀테크의 분류 및 사례	5
	1. 개념 및 분류	5
	2. 국내외 사례	6
	가. 녹색 데이터의 생성 및 보고	6
	나. 녹색 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	10
	다. 녹색금융상품 플랫폼	14
	라. 디지털 녹색자산 플랫폼	17

그린핀테크(Green FinTech)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III	정책적 시사점	19
	1. 금융배출량 플랫폼에 핀테크 참여 기회 확대	19
	2.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그린핀테크 적극 수용	25
	3.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용성 확대	27
	4. 기타 정책지원 강화	30
	참고문헌	33
	Abstract	35

표목차

〈표 I-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개요)	3
〈표 II-1〉 그린핀테크의 분류(Taxonomy)	6
〈표 II-2〉 녹색 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 사례	11
〈표 II-3〉 녹색 데이터의 분석 및 인슈어테크 사례	12
〈표 II-4〉 녹색투자 솔루션 사례	14
〈표 II-5〉 녹색 예금 및 대출 솔루션 사례	15
〈표 II-6〉 녹색 크라우드펀딩 및 신디케이션 플랫폼 사례	15
〈표 II-7〉 디지털 녹색자산 솔루션 사례	17
〈표 III-1〉 온실가스 측정의 기본 단위	20
〈표 III-2〉 PCAF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방식	21
〈표 III-3〉 녹색분류체계 기후테크 관련 경제활동 및 예시	26
〈표 III-4〉 스위스 Green Fintech Network의 주요 역할	32

그림목차

〈그림 Ⅰ-1〉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체계	2
〈그림 Ⅱ-1〉 그린핀테크의 개념	5
〈그림 Ⅱ-2〉 Pensumo의 보상 구조	8
〈그림 Ⅱ-3〉 신한 그린인덱스 서비스 화면	9
〈그림 Ⅱ-4〉 Cogo의 NatWest 적용 화면	9
〈그림 Ⅱ-5〉 Impaakt의 기업평가 예시	12
〈그림 Ⅱ-6〉 Altruistiq의 탄소발자국 예시	12
〈그림 Ⅱ-7〉 그리너리 탄소크레딧 거래 플랫폼 POPLÉ	17
〈그림 Ⅲ-1〉 신용정보원 금융배출량 플랫폼의 구조	21
〈그림 Ⅲ-2〉 싱가포르의 탄소배출량 산출 생태계	22
〈그림 Ⅲ-3〉 HKMA의 Project Evergreen 사업구조	29
〈그림 Ⅲ-4〉 싱가포르 MAS의 Greenprint Platforms	30

I. 논의의 배경

■ 그간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목표 설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및 시행, 산업별 맞춤형 전략 수립 등의 실행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음.

· 금융당국도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고배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집행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의 확대 등을 통해 거래기업들이 신속하게 친환경 저탄소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특히, 한국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확정과 공시기준 도입 로드맵(2026년 이후 시행 예정) 공표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규제환경에 적응(의무공시 이행)하기 위한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탄소중립화 노력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금융 분야에서 기후리스크 관련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핀테크(green fintech)’는 아직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그린핀테크는 기후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과 양질의 데이터를 금융 부문에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외 그린핀테크 기업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II. 그린핀테크 분류 및 사례

■ **(녹색데이터의 생성 및 보고)** 금융소비자의 구매행위에 대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산출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거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추적·보고하는 서비스(탄소회계)를 의미함.

- 금융회사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로는 MDP가 Mastercard와 제휴한 사례, Cogo가 영국계 은행인 The NatWest와 제휴한 사례 등이 있고, 국내에는 신한카드가 비자(VISA)와 공동으로 '신한 그린인덱스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에게 탄소발자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해외 탄소회계(carbon accounting) 사업자로는 Doconomy, Tred, Keewe, ESGpedia 등이 있음.

■ **(녹색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 다양한 경로로부터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신용 평가, ESG등급 평가, 기업활동이나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함.

-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핀테크 회사 Impaakt는 수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집단지성)를 활용하여 ESG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Altruistiq는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기업이 탄소발자국 정보를 기반으로 환경적 영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인공지능, IoT, 그리고 위성 이미지 등을 이용해 기후 및 자연 관련 리스크를 모델링, 예측, 시뮬레이션하는 녹색 인슈어테크도 이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데, CelsiusPro와 같은 회사가 있음.

■ **(녹색금융상품 플랫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녹색 재무설계 및 투자 지원 서비스,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집하거나 대출을 중개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함.

- 녹색투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핀테크 업체로는 FMZ 등이 있는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투자대상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맞춤형 녹색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녹색 클라우드펀딩 핀테크의 해외사례로는 Bettervest, Kana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그리너리, 후시파트너스가 기업이 탄소감축 활동을 통해 확보한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디지털 녹색자산 솔루션)** 녹색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무형자산(예: 탄소크레딧, 생물다양성크레딧)의 디지털화를 위해 암호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의미함.

- 스위스의 TreeCoin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파라과이에 숲을 조성하는 재식림(reforestation)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핀테크는 아니지만 홍콩 금융청(HKMA)은 녹색채권의 발행 및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3년 68억 홍콩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동 사업에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한 사례도 있음.

III. 정책적 시사점

■ 그린핀테크가 금융 생태계에 적극 편입되어 시장에서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활발히 개진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함.

■ 첫째,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 산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음.

- * 금융배출량은 포트폴리오 내 투자 및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서 Scope 3에 해당함.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직접 산출·보고할 경우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수단을 갖게 되며,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여줄 수 있어 전환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됨.

- 즉,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산출·보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린핀테크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린핀테크의 참여가 늘어나면 금융배출량 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해야 함.

■ 둘째,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그린핀테크를 반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021년 12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제정되었으며,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다만, 그린핀테크는 디지털 금융 기술을 활용하여 녹색 프로젝트 및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등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이에 따라,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 이들을 예시로 반영하거나,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여 사전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면 이들에 대한 투자나 금융연관업종 지정이 용이할 것임.

■ 셋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정부 주도의 녹색금융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강화하고 그린핀테크의 초기 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그린핀테크가 금융산업에서 갖는 유용성을 감안할 때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여 적용 대상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기업들이 ESG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공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집중화된 플랫폼(Greenprint Platform)을 구축하였고, 동 플랫폼 상에 '기업(금융회사 포함)-그린핀테크'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홍콩 금융청(HKMA)은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활용해 68억 홍콩달러 상당의 녹색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Digital Asset, InterOpera, Allinfra 등 다수의 핀테크 업체들이 참여한 바도 있음('Project Evergreen').
- 이와 같은 녹색금융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필요시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린핀테크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면, 그린핀테크 육성 차원에서 시너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금융당국-그린핀테크-기업-금융회사'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이미 두 차례 ‘그린핀테크 챌린지(Green FinTech Challenge)’를 개최하여 선발된 그린핀테크 기업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 바 있음.
- 스위스는 연방평의회(The Federal Council) 차원에서 지속가능금융을 스위스 금융산업 진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보고, 재무부 산하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Finance(SIF)가 ‘Green Fintech Network’이라는 워킹그룹을 창설하여 스위스의 그린핀테크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CAC)은 2021년 5월 Sustainable Finance Action Council을 설립(2024.3.31.까지 한시 조직)하고 정부의 기후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민간 시장에서 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자문을 해 왔음.
- 우리나라가 지속가능금융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발표되는 시점에서 그린핀테크 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목표 설정, 탄소 중립기본법 제정, 산업별 맞춤형 전략 수립 등의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2020년 10월, 국가적 차원에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net-zero’)¹⁾ 선언을 하였고, 2021년 10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다소 의욕적인 중간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2022년 3월 시행),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2023년 3월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발표하여 부문별로 맞춤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그림 1-1〉).

금융당국도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고배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의 확대 등을 통해 거래기업이 원활하게 친환경·저탄소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금융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환경부는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표 1-1〉과 같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지침」(2024)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에 앞서 2022년 12월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1)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순(純, net) 온실가스 배출량이 영(零, zero)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1-1〉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체계



자료 : 국무조정실(2023.4.10.)

〈표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개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금융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환경부)
①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	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여신, 공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②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 펀드」를 신규 조성	②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제도를 마련하고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녹색투자 기반 마련
③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 조성	③ 녹색채권·여신 등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민간 녹 색투자를 30조원까지 확대
④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④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위탁거래 도입 등 배출권거 래제 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녹색투자 촉진

자료 : 금융위, 환경부(2023.3.19.)

이러한 일련의 탄소중립 정책과 더불어 한국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확정과 공시기준 도입 로드맵 공표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규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탄소중립화 노력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국의 경우 이러한 친환경·저탄소 체계로의 전환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금융권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금융권에서 기후리스크 및 관련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과 양질의 데이터터를 지원하는 기술 또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핀테크 기업을 ‘그린핀테크(green fintech)’로 부르고 있는데, 특히 영국·싱가포르 등은 탄소중립 노력의 일환으로 그린핀테크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반면,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듯하다. 그린핀테크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핀테크는 금융회사와 기업, 나아가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후 및 환경 분야의 규제요구(regulatory requirements)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 및 환경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가공 및 이를 이용한 모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핀테크가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핀테크가 탄소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최근 연구로는 Alsedrah (2024), Wang

et al.(2024) 등이 있고, 핀테크가 제공한 탄소발자국 정보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 변화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연구로는 Enlund et al. (2023)²⁾이 있다. 아울러, 녹색위장행위(green washing)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그린핀테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그린핀테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단순히 규제준수(compliance)를 넘어 기후 및 환경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금융회사가 이러한 정보를 영업 및 재무 의사결정(리스크관리, 자본배분 등)에 반영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 센서(smart sensor) 및 인공지능(AI)의 발전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기후테크(climate tech)'에 힘입은 바 크다고 판단된다. 즉, 핀테크는 대용량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녹색금융상품 개발 등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의 실현과 고도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녹색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녹색금융 허브로 성장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중소기업들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보고 부담을 축소하는데에도 그린핀테크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의 경우 은행들이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인센티브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린핀테크가 활성화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그린핀테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그린핀테크의 기본개념, 분류 및 현재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린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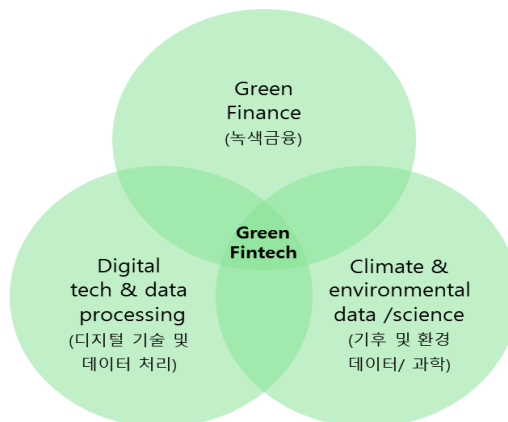
2)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2장 2절 가에 기술되어 있다.

1

개념 및 분류

그린핀테크(green fintech)는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 기술’(financial technology to promot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로 설명할 수 있다. CGFI(2024)는 녹색금융, 디지털 기술 그리고 기후 및 환경 과학이 만나는 접점에 그린핀테크가 존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① 녹색금융(green finance)은 환경 친화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②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처리(digital tech & data processing)는 말 그대로 디지털 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저장·가공·분석하는 분야, ③ 기후 및 환경 데이터/과학(climate & environmental data/science)은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린핀테크는 이러한 세 분야 모두와 연관성이 높는데,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II-1>와 같다.

<그림 II-1> 그린핀테크의 개념



자료 : CGFI(2024), 저자 번역/수정

GDFA(2022)는 그린핀테크를 8개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표 II-1>에 이를 정리하였다. 본 고에서는 경계가 모호한 분야들을 묶어 그린핀테크의 주요 분야를 4개로 축약해 정의하고, 국내외 선도기업과 사업모델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표 II-1〉 그린핀테크의 분류(Taxonomy)		
GDFA(2022) 분류		본고의 분류
① Green digital payment and account solutions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결제(payment) 등에 반영	녹색 데이터의 생성 및 보고
⑧ Green regtech solutions	공시, 보고 등 규제당국의 요구사항 충족	
③ Digital ESG data and analytics solutions	디지털 ESG 데이터 및 분석 솔루션	녹색 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
⑤ Green digital risk analysis and insurtech	녹색 디지털 리스크 분석 및 인슈어테크	
② Green investment solutions	녹색투자 솔루션	녹색금융상품 플랫폼
④ Green digital crowdfunding and syndication platforms	녹색 디지털 크라우드펀딩 및 신디케이션 플랫폼	
⑥ Green digital deposit and lending solutions	녹색 디지털 예금 및 대출 솔루션	
⑦ Green digital asset solutions	녹색분야의 토큰 및 인프라(블록체인)	디지털 녹색자산 솔루션

자료 : GDFA(2022) 참고하여 저자 재정의

2

국내외 사례³⁾

가. 녹색 데이터의 생성 및 보고

금융소비자의 구매행위에 대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산출하여 금융 회사에 제공하거나, 기업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추적·보고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서 탄소발자국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하는데, 참고로 Enlund et al.(2023)은 모든 금융거래를 포괄하는 탄소계산기

3) GDFA(2022)에서 예시한 그린핀테크 기업들 중 일부를 조사하여 본절에서 사례로 포함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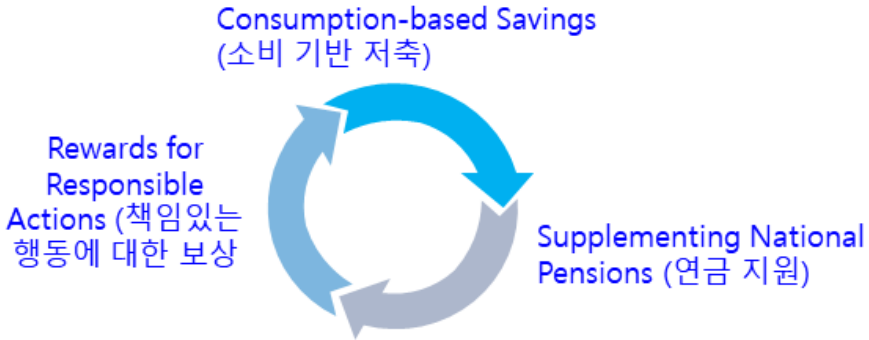
(carbon calculator) 사용자들이 얼마나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탄소계산기 앱(App)을 사용하는 스웨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상세한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한 결과, 초기 몇 주(week) 동안은 매주 약 10%씩의 탄소배출량 감소가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앱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분야의 대표 사례로 이집트의 결제서비스 회사인 Masria Digital Payments (MDP)가 있는데 2023년 12월에 Mastercard와 제휴하여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환경영향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즉, 고객의 구매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나무의 숫자를 그림으로 보여 줌으로써 고객의 소비행동(consumer behavior)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스라엘 핀테크 회사인 Cogo는 영국의 은행인 The NatWest Group의 모바일앱에 고객의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⁴⁾ Credit Agricole, RaboBank, BBVA 등도 유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사의 의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의 친환경적 소비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을 유도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은행권을 대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스페인의 핀테크 기업인 Pensumo(“Pension by Consumption”)는 고객의 소비데이터를 받아 친환경 소비에 비례하여 소액의 포인트를 연금에 적립해 주는 모델을 운영 중이다. 지속 가능한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과 협력하여, 사용자들이 해당 업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4) www.cogo.co/natw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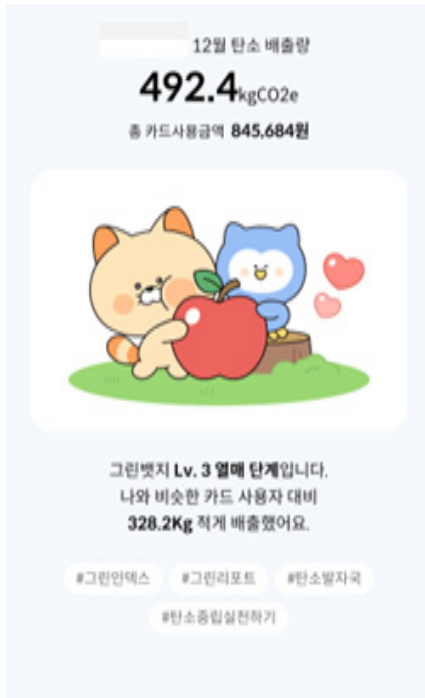
〈그림 11-2〉 Pensumo의 보상 구조



자료 : <https://pensumo.com>, 저자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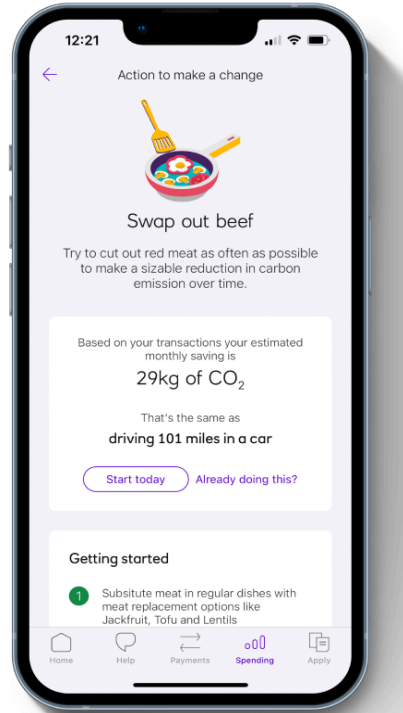
다만, 국내의 경우 신한카드가 비자(VISA)와 공동으로 ‘신한 그린인덱스 서비스’를 개발하여 2021년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신한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업종별 탄소배출량을 킬로그램(kg) 단위로 추정하여 매월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50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각 업종에서 1원을 소비하는 경우 배출되는 평균적인 탄소량 추정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신한카드가 제공하는 월별 그린리포트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72개 업종에 한정하여, 8개 영역별(마트·편의점, 쇼핑·패션, 가전·생활, 교통·자동차, 문화·레저, 음식·카페, 뷰티·건강, 가정·에너지)로 산출한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제공한다.

〈그림 11-3〉 신한 그린인덱스 서비스 화면



자료 : 신한카드 홈페이지

〈그림 11-4〉 Cogo의 NatWest 적용 화면



자료 : www.cogo.co/natwest

향후 특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마이데이터에서 모든 결제정보(all financial transactions)를 통합하여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이러한 탄소배출량 정보의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식화(예: 나무의 갯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을 측정·추적·보고하는 사업(이를 '탄소 회계(carbon accounting)'라 한다)을 영위하는 해외 사업자로는 Doconomy (www.doconomy.com), Carbon Chain(www.carbonchain.com), Tred (<https://tred.earth>), Keewe(<https://en.keewe.eu/>) 등이 있다. 금융회사가 이들 핀테크 기업을 녹색대출 영업에 직접 활용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2022년 HSBC은행(PT Bank HSBC Indonesia)은 리조트 그룹 Citadines

Bali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설 구축을 위한 대출을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ESGpedia가 IoT를 활용한 스마트 센서를 통해 수집한 온실가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⁵⁾ 이를 통해 HSBC는 녹색금융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탄소 금융(decarbonization financing)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Citadines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보다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녹색인증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금융회사들이 이들 탄소회계사업자로부터 생산된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탄소회계사업자들은 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핀테크로 분류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금융배출량 산출 등 금융회사의 녹색전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GDFA, CGFI 등은 이들을 그린핀테크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내의 경우, 리빗(www.tanso.life/ko), 앤츠(<https://aents.co>) 등이 기업용 탄소배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자사 기업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KB탄소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의 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Scope 1과 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이라고 설명한다.

이들 탄소회계사업자들은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분석하고, 감축 및 상쇄를 위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CSRD, ISSB 등 글로벌 규제 및 기후 공시에 대응하는 국제 가이드라인 기반의 보고서를 생성하기도 한다.

나. 녹색 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

전문가 보고서,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 기업 공시, 공공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경로로부터 정형·비정형 녹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신용 평가, ESG등급 평가, 기업활동이나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IoT 기기와 결합한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

5) <https://esgpedia.io/decarbonising-finance-hospitality>

거나, 위성, 항공 센서, 기타 모니터링 장치를 기반으로 관찰된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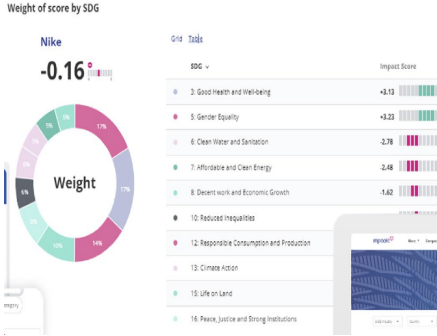
〈표 11-2〉 녹색 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 사례

세부분야	내용
녹색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신용평가 알고리즘에 녹색 데이터를 통합하여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영향을 기반으로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위험성이나 신용도를 평가
ESG등급 평가	기업 및 투자 펀드의 ESG 성과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서비스 제공
기업활동의 환경영향 평가	기업의 환경적 요인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녹색 인덱스(digital green index)를 생성하는 서비스 등임.

관련 사례로는 스위스 핀테크 회사인 Impaakt(www.impaakt.com)가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의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ESG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커뮤니티 기반 평가 시스템으로 55,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집단지성)를 활용하여 기업들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연구물(research), 점수(score) 및 분석 결과(analytics)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데이터가 플랫폼에 추가되면, 커뮤니티의 평가를 거쳐 정보가 공개되는 시스템이다. Impaakt은 전 세계 5,000여개 기업에 대해 1백만 건 이상의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약 48,000개의 환경 및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게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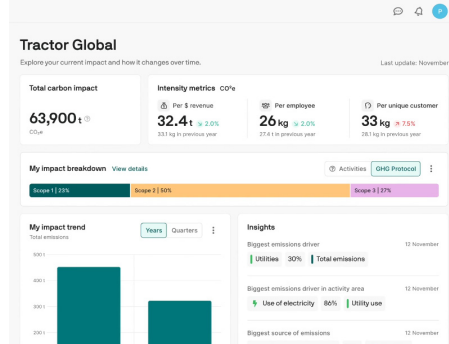
Altruistiq(www.altruistiq.com)는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대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데이터(sustainability data)의 측정, 관리 및 교환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기업의 탄소발자국, 제품의 탄소발자국, 공급망 관리(supply-chain engagemen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기업이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적 영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II-5〉 Impaakt의 기업평가 예시



자료 : Impaakt

〈그림 II-6〉 Altruistiq의 탄소발자국 예시



자료 : Altruistiq

한편, 인공지능, IoT, 그리고 위성 이미지 등을 이용해 기후 및 자연 관련 리스크를 모델링, 예측, 시뮬레이션하는 녹색 인슈어테크(green insurtech)도 이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데, 보험회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평가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고 적정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표 II-3〉 녹색 데이터의 분석 및 인슈어테크 사례

세부분야	내용
기후리스크 분석 및 평가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자동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녹색보험 개발	녹색 자산(전기차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 및 제공되는 보험상품(온라인 플랫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관리, 청구 등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녹색 보험)의 개발
동적 요율 산정(dynamic pricing)	실시간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하여 녹색 자산의 보험료(pricing)와 보험가입 심사(underwriting) 기준을 유동적으로 조정
녹색보험 대상자산 모니터링	IoT 기술을 사용하여 보험 대상인 녹색 자산의 상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녹색보험 처리 자동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녹색 보험 청구 및 보상 절차 자동화

해당 분야의 그린핀테크 사례로는 인슈어테크 기업 CelsiusPro(www.celsiuspro.com)가 있는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 솔루션과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지수형 보험은 독립적인 외부기관 또는 공식 기상관측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보상이 결정되는 손해보험인데, 보험금은 보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지급되고 추가적인 손실 증빙은 요구하지 않는 방식을 따른다. 즉, 전통적인 손해보험 상품과는 달리 특정 지표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거나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위치와 교차하는 허리케인 경로의 최대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된다거나, 일일 최저기온(또는 최고기온)이 보험사에서 설정한 임계치를 초과하는 일수(日數)가 기준 횟수를 초과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따른다. CelsiusPro는 허리케인,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온도와 강우량과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보험요율을 결정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3월, CelsiusPro는 Aviva Canada에 지수형 강우 보험을 설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 바 있는데, 강우 데이터는 NASA로부터 제공받았다.

핀테크 기업은 아니지만 영국의 보험사 FloodFlash(<https://floodflash.co>)는 센서 기술을 사용하여 홍수에 특화된 지수형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 자산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가 미리 설정된 수준을 뛰어넘는 침수 깊이를 감지하면 추가 증빙 없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Jupiter Intelligence(www.jupiterintel.com)는 기후 리스크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모델을 활용해 기후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보험료 및 언더라이팅, 수익성,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등에 대하여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사의 정보는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관리, 부동산, 에너지,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리스크를 평가하고 정부와 기업에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지수형 보험상품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수형 보험상품 개발에는 데이터 확보가 핵심인데, 글로벌 보험사들은 인공위성, IoT 센서,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반면, 국내 보험사들은 제한적인 자원과 기술의 한계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⁶⁾

6) <https://www.kongje.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62>

다. 녹색금융상품 플랫폼

첫째, 이 분야에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녹색 재무설계 및 투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색투자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또는 녹색투자 솔루션이 있다. 녹색투자 로보어드바이저는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의 위험선호(risk preference)와 목표 수익률에 맞춰 녹색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준다.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플랫폼도 상용화되어 있는데, FMZ(www.fnz.com)는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규제준수, 투자 의사 결정, 투명성 개선 등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투자 대상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융회사들이 규제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녹색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II-4〉 녹색투자 솔루션 사례

세부분야	내용
알고리즘에 기반한 녹색자산의 매매 거래	개별투자자가 녹색 자산을 중심으로 알고리즘에 기반한 거래를 수행
녹색투자 자문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녹색투자에 대한 자문 제공
녹색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자의 목표와 지속 가능성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기준에 따라 녹색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리스크 평가	환경적 요소를 기준으로 투자 리스크를 평가

금융회사 등을 위해 환경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Iceberg Data Lab(www.icebergdatalab.com)이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지표와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당사는 기후 솔루션, 규제 준수 솔루션, AI 기반 지속 가능한 금융정도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둘째,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녹색 예금 또는 대출을 중개하거나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있다.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제품 구매를 위한 소비자 대출, 부동산이나 선박 등의 자산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담보대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표 II-5〉 녹색 예금 및 대출 솔루션 사례

세부분야	내용
녹색 디지털 대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친환경 제품 구매를 위한 대출 등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대출
모니터링 기반의 녹색 대출 또는 전환 대출(transition loans)	IoT, 센서 등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대출이 사용되는 목적과 친환경 성과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친환경 행동 또는 지속가능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출
녹색 디지털 모기지	부동산, 선박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거나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디지털 기반 담보 대출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인 Hemma(www.hemma.energy)는 주택 소유자들이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기지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자산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전환전략⁷⁾ 수립을 돕기도 한다.

셋째, 녹색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플랫폼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다. 녹색 사업, 녹색 프로젝트, 또는 녹색 전환⁸⁾ 등을 위해 소규모 자금을 다수의 개인투자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조달하거나, 신디케이션(공동유자)을 통해 자본을 모집하는 플랫폼이 이에 해당된다.

〈표 II-6〉 녹색 크라우드펀딩 및 신디케이션 플랫폼 사례

세부분야	내용
녹색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친환경 기술 스타트업,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녹색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형태
녹색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리모델링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위해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제공하는 형태
녹색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환경 보호, 재생에너지 연구, 생태계 복원 등 친환경 목적을 위해 참여자가 자금을 기부하여 비영리적인 녹색 프로젝트를 지원

7) 전환전략(transition strategy)이란 금융기관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녹색 자산의 비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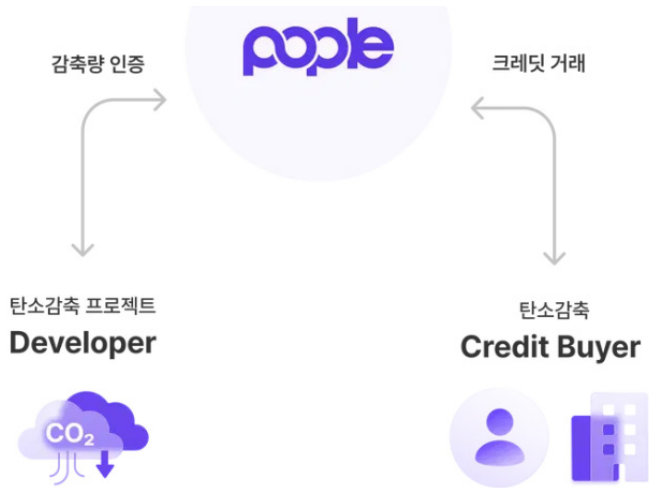
8)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부동산 개보수 등 기존 자산을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분야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사례로는 투자자와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Bettervest(www.bettervest.com)가 있는데, Bettervest는 2024년 9월까지 전 세계 20개국에서 100여개의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하였으며, 총 156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이 분야에서 확장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영국의 기후기술 기업인 Kana Earth(www.kana.earth)가 있으며, 자연자본(natural capital)⁹⁾ 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사는 Kana Hub와 Kana Seed라는 두 개의 플랫폼을 통해 자연자본 프로젝트의 개발, 관리, 투자 및 거래를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Kana Hub은 자연 자본 프로젝트의 관리, 마케팅, 통합 및 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며, Kana Seed는 투자자와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자연 자본에 대한 투자와 토지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내에서는 그리너리(www.greenery.im/lo)와 후시파트너스(www.hooxipartners.com)가 기업이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확보한 탄소크레딧(carbon credit)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너리는 기업이 탄소크레딧을 인증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팝플(POPLE)을 운영하고 있으며, 후시파트너스는 기업이 탄소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는 감축 사업과 탄소 크레딧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루트펀드(<https://rootenergy.co.kr>)는 친환경 투자 플랫폼을 통해 태양광, 풍력 발전소,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사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고 있는데, 기후 펀드와 커뮤니티 펀드를 운영하여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고 있다.

9)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천연자원이나 생태계를 의미한다.

〈그림 11-7〉 그리너리 탄소크레딧 거래 플랫폼 POPLÉ



자료 : 그리너리(www.greenery.im/)

라. 디지털 녹색자산 플랫폼

이 카테고리는 녹색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무형자산(예: 탄소크레딧, 생물다양성크레딧)의 디지털화를 위해 암호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의미한다.

〈표 11-7〉 디지털 녹색자산 솔루션 사례

세부분야	내용
녹색 유틸리티 토큰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디지털 토큰
녹색 자산 토큰	유·무형의 녹색 자산을 토큰화한 디지털 토큰
녹색 암호화폐	기존 암호화폐의 높은 에너지 소모를 개선하기 위해 지분 증명(Proof of Stake) 방식 등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암호화폐 또는 녹색 상품 및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녹색 STO 발행 플랫폼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 발행(STO) 플랫폼

예로 스위스의 TreeCoin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파라과이에 숲을 조성하는 재식림(reforestation)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가 삼림파괴(deforestation)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9년 파라과이의 12,000 헥타르에 달하는 휴경지에 1,000만 그루의 유칼립투스(eucalyptus)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TreeCoin사는 'Tree'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하는데 23 USD에 1 Tree를 사게 된다. 1 Tree는 유칼립투스 묘목 1그루에 해당된다고 한다. 유칼립투스는 산소 배출량이 많아 산소탱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성장이 빨라서(연간 3m 정도 성장) 4년 정도면 목재로도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성장한 유칼립투스 나무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약 40%는 Tree 토큰의 보유자들에게 돌려주고, 50%는 재투자(reforestation)에 사용된다. 그리고 1 TreeCoin 당 100개의 TXC라는 통화토큰(currency token)이 생성되는데, 식림지 현지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프로젝트(social project)에 사용되고 있다. TXC는 파라과이 정부로부터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화폐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TreeCoin사의 모델을 '이중코인 모형(dual-coin mode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의미있고 대담한 모델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는 지구를 구하는 인간(<https://geegoo.io>)이 탄소배출권을 NFT로 발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권을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토큰화된 녹색 채권(tokenized green bond)도 이 카테고리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녹색 채권 등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발행·관리·거래 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3장 3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앞서 예시한 국내외 그린핀테크 사례들은 이러한 사업모델들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혁신의 주체 혹은 촉매(enabler)로서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금융당국도 다음과 같은 정책을 통해 경쟁과 혁신에 기반한 녹색금융 생태계가 조성·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금융배출량 플랫폼에 핀테크 참여 기회 확대

2023년 6월 IFRS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ISSB)가 발표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은 금융회사(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가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 즉, ‘포트폴리오 내 투자 및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의 방법론을 따르도록 권고한 바 있다.¹⁰⁾ 2024년 4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금융배출량은 Scope 3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면 도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PCAF 방법론에 따르면 금융회사 j 의 금융배출량은 다음 식으로 산정된다.

$$\sum_i \left[\frac{\text{거래기업 } i \text{에 대한 금융회사 } j \text{의 익스포저}}{\text{거래기업 } i \text{의 총자산가치}} \times \text{거래기업 } i \text{의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2)} \right]$$

10) ISSB가 발표한 IFRS S2 Scope 3, Category 15(Investment)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financed emissions: The portion of gross greenhouse gas emissions of an investee or counterparty attributed to the loans and investments made by an entity to the investee or counterparty. These emissions are part of Scope 3 Category 15 (investments) as defined in the Greenhouse Gas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

여기서 분모는 기업*i*(차주 또는 투자 대상 기업)의 ‘보유현금을 포함한 총자산 (Enterprise Value Including Cash: EVIC)’이며, 분자는 금융회사*j*가 해당 기업 *i*에게 공여한 ① 기업여신 및 보유한 비상장 주식(business loans and unlisted equity), ② 보유 상장주식 및 회사채(listed equity and corporate bonds), ③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④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⑤ 모기지(mortgages), ⑥ 운송장비 여신(motor vehicle loans), ⑦ 국채(sovereign debt) 익스포저의 합이 된다. 각 자산군 별로 익스포저 산출방식은 상이하다.

상기 식에서 $\frac{\text{거래기업 } i \text{에 대한 금융회사 } j \text{의 익스포저}}{\text{거래기업 } i \text{의 총자산가치}}$ 을 거래기업 *i*의 기여비율(attribution factor)라고 부른다. PCAF는 포트폴리오 내 거래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세가지(Option 1, 2, 3)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1> 온실가스 측정의 기본 단위

	개념 ¹⁾	예시
Scope 1 (Direct emissions)	기업이 소유·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금융회사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 발전기 등을 사용하면서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Scope 2 (Indirect emissions)	기업이 전기, 스팀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실가스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전기를 발전회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탄소
Scope 3 (Other indirect emissions)	가치사슬 전체에서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배출량 (금융배출량 포함)	납품업체가 배출하는 탄소, 물류업체가 배출하는 배기가스

주 : 1) 금융위(2024.12.12.), 보도자료.

〈표 Ⅲ-2〉 PCAF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방식

산출 방식		내용
Option 1	보고된 배출량 (Reported emissions)	차주 또는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직접 입수하거나(예: 지속가능성 보고서) 인증받은 제3자 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간접적으로 입수한 탄소 배출량
Option 2	물리적 활동 기반 배출량(Physical activity-based emissions)	차주 또는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입수한 주요 물리적 행위 정보(예: 천연가스 사용 시간, 철강 생산량)로부터 추정된 탄소 배출량
Option 3	경제적 활동 기반 배출량(Economic activity-based emissions)	차주 또는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입수한 경제적 활동 정보(예: 매출액, 부문별 자산 규모)로부터 추정된 탄소 배출량

자료 : PCAF(2022)

한편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¹¹⁾ 이에 따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KICS, 이하 ‘신용정보원’)이 표준 금융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금융분석지원시스템(EFAS)을 이용하여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집적하고 있다(〈그림 Ⅲ-1〉). 신용정보원은 기업별로 신용익스포저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기여비율을 파악하고 검증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PCAF가 제시한 거래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방식은 〈표 Ⅲ-2〉에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현재는 Option 2, 3 방식에 주로 의존하여 데이터를 집적하고 있다.¹²⁾

〈그림 Ⅲ-1〉 신용정보원 금융배출량 플랫폼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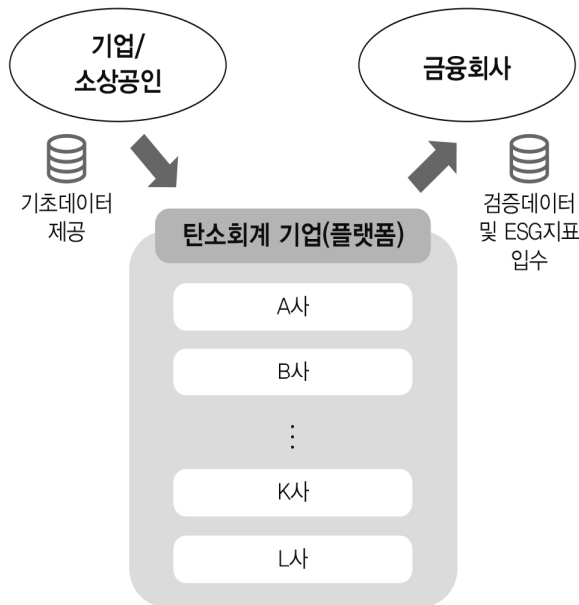
자료 : 금융위(2024.12.12.), 보도자료.

11) 금융위원회 (2024.12.12.), “제6차 기후금융TF 및 ‘24년 기후금융 추진현황,” 보도자료.

12)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대기업 등 탄소배출량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수(2,000개 내외)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의 정보는 공시 정보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에서 추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플랫폼 구축 방안은 외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탄소배출량 정보를 수집·가공·추정하는 사업자(주로 핀테크)를 선택하여 정보를 투입하고 이들 사업자들이 금융회사에 검증된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Option 1).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Ⅲ-2>와 같다. 즉,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집중기관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2> 싱가포르의 탄소배출량 산출 생태계



- 기업들이 제공한 기초데이터가 제반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
- 검증(인증) 데이터의 보관
- ESG 지표 산출 및 보관
- 각기 다른 기업(플랫폼)들은 다른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자료 : 저자 작성

상기 두 가지 방식에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즉, 한국형 금융배출량 플랫폼(‘중앙집중식’)의 경우 신용정보원이 기업여신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Option 2, 3에 집중하고 있어 신속하게 금융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 기업이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산출·보고하는 과정에서 핀테크, 신

용평가(정보)회사 등이 참여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보다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측정·수집·추정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나 소상공인(SME)이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핀테크 회사에 제공하면, 핀테크는 이를 가공한 후 각종 기준(예: ISSB, ISO, WFE 등)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검증된 데이터를 의뢰 기업에 다시 제공하거나,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 산출을 위해 이들 데이터를 요청한 경우 해당 기업의 허락을 얻어 제공하게 된다. 금융배출량을 신속하게 산출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탄소배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 또한 그린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영업 및 혁신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 정보의 수집 및 집적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증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그린핀테크 기업들은 탄소배출 정보를 집적·추정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태계 내에서 신용정보원은 금융배출량 인프라의 중심으로서 공공정보 등 기초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글로벌 및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도록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정착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전환금융을 실행하기도 수월해진다.

요컨대, 향후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쟁적 요소를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린핀테크 업체들이 틈새시장에 들어가 다양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더 나은 리포팅 수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산출·보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린핀테크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린핀테크의 참여가 늘어나면 금융배출량 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도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금융회사 금융배출량 정보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 싱가포르의 그린핀테크 기업 ESGpedia 사례

- 싱가포르 기반의 그린핀테크 기업 ESGpedia는 금융기관, 기업, 소상공인(SME)을 위한 포괄적인 ESG 데이터와 공시지원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20년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은 기업들의 ESG 데이터 관리 및 보고를 돕기 위해 Project Greenprint(pilot project)를 추진하였는데, ESGpedia(당시 사명은 Staccs)가 ESG Registry 구축에 참여하였음.¹³⁾
- 현재 ESGpedia는 개별 기업이 자사의 ESG 데이터를 기록하고 공시하며 다른 기업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SGpedia Nexus와 금융기관 및 기업이 관계사의 ESG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ESGpedia Intelligence 두 가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ESG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시보드(dash board)를 제공하고 있음.
 - * 예컨대, 환경(Environmental) 관련 자료 중 Scope 1 배출량에는 연료 소비에 따른 이동자산(mobile assets)의 연소 등이 포함되며, 사회(Social) 데이터에는 다양성 및 기회의 평등, 건강 및 안전, 직원 발전 및 트레이닝, 아동 노동과 관련된 자료 등이 포함되고,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 자료에는 이사회 구성과 부패 방지를 위한 척도 등이 포함됨.
- ESGpedia와 같은 탄소회계 기업들은 GRI(Th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및 ISSB 기준 공시자료 외에도, 해당 지역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자료를 생성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개별 기업은 레지스트리 상의 자료를 취합하여 ESG 공시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해당 기업의 ESG 활동을 확인할 수 있음.

13) <https://esgpedia.io/esgpedia-officially-launches-aggregating-verified-esg-data-and-certifications-across-various-sectors-to-enable-more-effective-green-finance/>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021년 12월 녹색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써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제정되었으며,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water)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녹색경제활동은 ‘녹색부문’ 77개, ‘전환부문’ 7개 등 총 84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3〉에서 볼 수 있듯이, 녹색분류체계에는 기후테크와 관련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에너지의 생산·저장·전환, 관련 인프라 구축·운영, 오염 방지·처리·정화,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등 관련 경제활동이 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소 감축 기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청정 모빌리티 기술, 순환경제 관련 기술, 기후 예측 기술, 친환경 도시·건축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솔루션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 기술을 활용하여 녹색 프로젝트 및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등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린핀테크 기업이 이들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매우 불분명하다. 사실, EU Taxonomy(Regulation 2020/852)에서도 ‘Green FinTech’ 혹은 ‘녹색금융활동과 관련된 금융기술’ 같은 용어를 찾아볼 수는 없다. Article 1 (Subject matter and scope)에서는 녹색경제활동을 판별하는 목적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¹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울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포함된 경제활동에 대해 다양한 금융(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을 뿐이다. 즉, 그린핀테크가 이러한 금융활동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14) This article outlines the subject matter, stating that the regulations establish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n economic activity qualifies a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for investment purpose.

이에 따라,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 그린핀테크를 예시로 제시하거나,¹⁵⁾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여 사전 유권해석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금융당국도 이들을 ‘금융연관업종’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에 유연하게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II-3〉 녹색분류체계 기후테크 관련 경제활동 및 예시

분야	경제활동	예시 ¹⁾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생산	스마트 그리드 및 AI 기반 발전 효율화 기술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수소 저장·운송 최적화, 연료전지 효율 개선
	전기 에너지 저장·전환	배터리 성능 향상·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열에너지 저장	스마트 냉·난방 최적화 기술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에너지 효율 최적화 알고리즘, 전력망 관리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 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배터리 효율 개선, 전기·수소차 운영 데이터 분석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충전 인프라 최적화, V2G(Vehicle-to-Grid) 기술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AI 기반 에너지 절감,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IoT 기반 효율 개선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AI 기반 데이터센터 효율 최적화, 액체 냉각 기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AI 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효율 개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기후변화 적응	바이오톱(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탄소농업 기술 개발, 바이오톱 활용 최적화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시스템 구축·운영	AI 기후 예측 모델, 기후 데이터 분석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하수·폐수 처리 및 가축분뇨 정화	AI 기반 수질 모니터링, 스마트 수처리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AI 기반 지하수 오염 실시간 감시, 정화 프로세스 최적화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스마트 도시물 관리 기술
	물 재이용	AI 기반 수자원 관리, 스마트 센서 활용
	비점오염 저감(저영향 개발(LID) 등)	AI 기반 수질 예측, 스마트 필터 시스템

15) 물론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절차’를 충족하는 사업의 유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자원순환 최적화
	폐기물 재사용	AI 기반 폐기물 선별, 자동 분류 기술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폐플라스틱 재활용 최적화, 바이오 연료화
	폐기물 에너지 회수	스마트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오염 방지 및 관리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AI 기반 대기오염 예측, 친환경 필터링 시스템
	실내공기질 관리 및 정화	AI 기반 실내 공기질 개선, IoT 센서 활용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 드론 활용 오염 탐지, AI 기반 해양 쓰레기 처리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AI 기반 토양 정화 최적화
생물다양성 보전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AI 기반 생태계 모니터링, 드론 활용 생태 복원
	도시 내 탄소 흡수원 조성	스마트 도시 녹지 관리, 탄소 저감 식물 활용
	지속 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드론·위성 기반 산림 모니터링, AI 기반 산불 예측

자료 : 환경부(202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주 : 1) 예시는 ChatGPT 4.0을 이용하여 생성(2025.2.7.), “경제활동별 기후테크 예시”, <https://chat.openai.com>

3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용성 확대

그린핀테크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유는 사업모델별로 다양할 것이나, 대체로 1)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망분리 규제외 예외 적용이 필요하고, 2) 정부의 정책자금 또는 비금융 지원을 받기 용이하며, 3) 금융연관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전단계로 인식하는 등의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린핀테크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지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그린핀테크의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이들 사업자들이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금융연관업종)인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그린핀테크가 금융산업에서 갖는 유용성을 감안할 때 혁신금융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여 적용대상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면 초기 그린핀테크 기업들에 대해 3~6개월 정도의 단기 서비스 제공 기간을 허용하고, 이후 성과를 보

고 추가로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어떤 사업이나 활동이 ‘녹색(친환경·저탄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핀테크’ 역시 매우 포괄적인 용어여서 이 또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그린핀테크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책의 공간에서 쉽게 배제할 수는 없다. 탄소중립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국가적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다면 정책지원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규제 샌드박스는 초기 실험의 좋은 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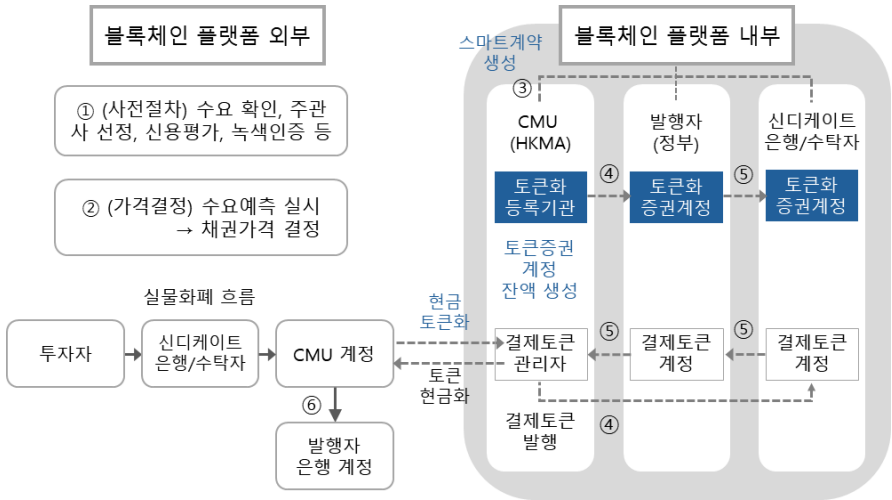
나아가, 녹색금융 공공 프로젝트를 확대하면서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린핀테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 준다면, 그린핀테크 육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그린핀테크는 글로벌 규제 도입 속도에 따라 사업성 및 기업(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투자 시기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초기시장 형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 금융당국은 각종 지원책과 더불어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pilot project)들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시장을 조성하거나, 기업-핀테크-금융회사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BIS 혁신 허브(BIS Innovation Hub)와 홍콩통화청(HKMA)이 녹색 금융의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Project Genesis라는 시범사업을 두차례 진행한 바 있다(HKMA, 2023). 2021년 시작한 Project Genesis는 녹색채권을 토큰화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 플랫폼은 블록체인과 IoT 기술을 활용해 투자자가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로 인해 생성된 청정 에너지의 양과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서 녹색채권은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Digital Asset, InterOpera, Allinfra 등 다수의 핀테크 업체들이 참여하였다. 이후 홍콩통화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채권의 발행, 결제, 이자 지급, 만기 상환 등 전체 자본시장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및 효율화하였으며, 2023년에 세계 최초로 토큰화된 녹색국채 8억 홍콩달러, 2024년에는 60억 홍콩달러 상당¹⁶⁾을

발행한 바 있다('Project Evergreen').

국내에서도 배정만·남명훈(2024)은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그림 III-3〉 HKMA의 Project Evergreen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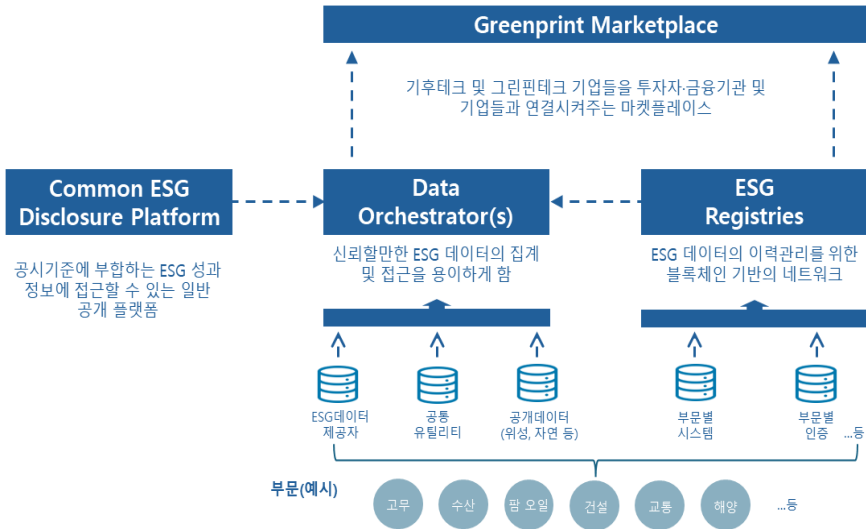
자료 : HKMA, 배정만·남명훈(2024) 재인용

또한, 2022년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기업들이 ESG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공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집중화된 ESG Registry 구축을 추진하였고, 이후에 이를 'Greenprint Platform'에 반영한 바 있다. 특히 〈그림 III-4〉와 같이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여 그린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그린핀테크 기업들과의 연결성을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녹색금융 시범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필요시 동 사업에 참여하는 그린핀테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강화하고 그린핀테크의 초기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16) 홍콩달러,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화, 유로화 4개 통화로 발행되었다.

〈그림 III-4〉 싱가포르 MAS의 Greenprint Platforms



자료 : www.mas.gov.sg, 자차 번역

4

기타 정책지원 강화

규제 샌드박스 이외에도 선진국 금융당국은 그린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18년과 2021년에 ‘그린핀테크 챌린지(Green FinTech Challenge)’를 개최하여 선발된 그린핀테크 기업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 바 있다. 2021년 경우 25개 기업이 신청하여 10개 기업이 ‘적격성 기준(eligibility criteria)¹⁷⁾’을 통과하였는데, 이 중 5개 기업(ESG 데이터 수집 및 분석, Scope 3 탄소 배출량 계산 솔루션 제공 기업 등)은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되었다.¹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그린핀테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및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

17) FCA는 Innovation, Benefit to consumers, Regulated business, Need for innovation services, Market readiness의 5개 기준을 제시했다.

18) 「Green FinTech Challenge 2021」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된 영국의 그린핀테크 업체로는 Granular, Green Growth Investments, Greenomy, Karfu, Xpander가 있다.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기업은 ‘혁신과정(Innovation Pathways)’ 대상으로 선정되어 FCA의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싱가포르 금융청(MAS)은 Project Greenprint를 통해 ‘Gprnt’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핀테크와 금융회사 등을 연결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평의회(The Federal Council) 차원에서 지속가능금융을 스위스 금융산업 진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그린핀테크가 매우 유망하다는 인식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스위스 재무부 산하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Finance(SIF)에서는 2020년 11월 ‘Green Fintech Network’이라는 워킹그룹을 창설하고 스위스의 그린핀테크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1년 Green Fintech Network는 ‘Green Fintech Action Plan’이라는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 III-4>는 Green Fintech Network가 수행해 온 주요 역할을 보여준다.

캐나다 금융소비자청(FCAC)은 2021년 5월 Sustainable Finance Action Council(www.sfac.ca)을 설립(2024.3.31.까지 한시 조직)하고 정부의 기후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민간 시장에서 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자문해 왔다.¹⁹⁾

19) SFAC의 설립 취지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make recommendations on critical market infrastructure needed to attract and scale sustainable finance in Canada”

〈표 III-4〉 스위스 Green Fintech Network의 주요 역할

주요 역할	내 용
그린핀테크 생태계의 연결성 확대 (Connect the wider green fintech eco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기업, 기업, 학계를 연결 · 스위스 내 그린 디지털 금융을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 · 기업들과 관련 스타트업 및 기술을 연결
그린핀테크의 가시성 확보 (Create visibility for green fintec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핀테크 지도(map)를 제작 및 유지 · 그린핀테크 생태계의 개요 제공 · 개별 그린핀테크 기업이 쉽게 노출되도록 지원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촉진 (Foster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금융기관과 협력 및 강화 · 지속가능성 관련 투명성 및 제고 · 지속가능성 리스크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속가능성 데이터의 접근성 강화 (Support availability of and ease of access to sustainability da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글로벌 지속가능성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 지원 · 데이터 제공업체에 대한 노출 확대
스위스 그린핀테크 기업을 위한 자금 및 지원 확보 (Ensure adequate funding and support is available for Swiss green fintec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캐피탈(VC) 투자자 및 컨설턴트를 그린 디지털 금융 스타트업과 연결 · 핀테크 기업의 성장 및 자금 조달 노력 지원 · 투자기회에 대한 정보를 VC들에게 투명하게 제공

자료 : Green Fintech Network(www.greenfintechnetwork.com), 저자 번역

우리나라가 지속가능금융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발표되는 시점에서 그린핀테크 지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캐나다의 SFAC와 같이 지속가능금융 촉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학계와 업계가 각종 지원체계 및 공공 녹색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2023.4.10.),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의결,”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3.3.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 금융위원회 (2024.12.12.), “제6차 기후금융TF 및 ‘24년 기후금융 추진현황,” 보도자료.
- 배정민·남명훈 (2024.10.3.),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 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제2024-29호, 한국은행.
- 환경부 (2023.3.19.),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
- Alsedrah, Ibrahim T. (2024), Fintech and green finance revolutioning carbon emission reduction through green energy projects in mineral-rich countries, Resource Policy 94, May 2024, p.1-10.
- CGFI (2024), Green Fintech 2.0: Next Generation Climate and Environmental Analytics to Accelerate Green Finance, UK Centre for Greening Finance & Investment, June 2024.
- Enlund, Jakob, D. Andersson, and F. Carlsson (2023), Individual Carbon Footprint Reduction: Evidence from Pro-environmental Users of a Carbon Calculator,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p.433-467
- GDFA (2022), Green Fintech Classification, Green Digital Finance Alliance and the Swiss Green Fintech Network.
- HKMA (2023), Bond Tokenization in Hong Kong,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 ISSB (2023),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June 2023.

PCAF (2022), *Financed Emissions: The Global Green House Gas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Second Edition,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Wang, Chan'an, L. Wang, S Zhao and C. Yang (2024), *The impact of fintech on corporate carbon emissions: Towards gree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advancing a range of policies aimed at achieving net-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In line with this national agenda, financial authorities have extended support to corporations and are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disclosure system to facilitate a smooth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Within this context, green fintech emerges as a strategic sector that can harness digital technologies and high-quality data to deliver innovative climate risk solutions for the financial industry.

To realize this potential,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enhancing the quality of financed emissions data, integrating green fintech into the K-Taxonomy framework, and identifying new public green finance initiatives. Furthermore, financial companies can leverage green fintech in their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to help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ransition to sustainable, low-carbon business models.



한국금융연구원(KIF) 발간물 현황

정기 간행물

▶ 격주간

- 금융브리프

▶ 연 2회간

- 경제전망시리즈

▶ 연 3회간

- 한국경제의 분석

▶ 계 간

- 금융연구

연구 발간물

▶ KIF 연구총서

2022-01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공사연금 -공사연금 체계와 금융시장의 역할-, 2022.4./김병덕
2021-03	비은행금융산업의 2030비전과 발전과제: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금융을 중심 으로, 2021.7./이재연·구정한·이규복
2021-02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금융투자업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2021.2./송민규·연태훈
2021-01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보험 산업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2021.1./김재현·이석호
2020-02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은행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2020.11./서정호·이병윤
2020-01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개관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2020.10./구본성·이순호
2017-01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및 대출 상품의 설계, 2017.3./송민규·노형식·박종상·박춘성·이보미·임 진
2014-01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 : 분석과 전망, 2014.7./구본성·김동환·박해식·이명활·박성욱·김영도·임 진·박종상·김석기·송민기

▶ KIF 연구보고서

2024-23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 분석 및 시사점, 2024.12./박준태·이수진
2024-22	만성부실기업 : 원인·영향·대책, 2024.12./이지언
2024-21	보험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사업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4.12./한상용·이석호
2024-20	코로나19 이후 용도별 수입물량 추이 분석, 2024.12./송민기
2024-19	우리나라의 소비행태 변화와 인플레이션, 2024.12./장 민
2024-18	은행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2024.12./이영경
2024-17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2024.12./임형석
2024-16	중요위험이전(SRT) 증권화와 은행 자본비용 절감 및 자본건전성 제고 효과 분석, 2024.12./신용상
2024-15	디지털 예금인출상태 위험과 국내은행의 대응 방안, 2024.12./구본성
2024-14	글로벌 VAR 모형을 활용한 대외충격 효과 분석 및 경제전망, 2024.12./김현태
2024-13	국내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2024.12./이시연
2024-12	이자 비용 상승의 소비 감소 효과에 대한 미시분석, 2024.8./김현열·박춘성
2024-11	경제의 역동성과 금융의 역할 - 전환기 한국경제와 금융발전 방향 모색 -, 2024.7./김동원·김동찬
2024-10	우리나라 주식형 일반공모펀드의 비용 및 성과 분석 : 국제비교 중심으로, 2024.6./이보미
2024-09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2024.4./이수진·박준태
2024-08	투자자 심리와 알트코인 거래에 대한 연구 : 김치코인과 SNS 자료를 바탕으로, 2024.2./백연주
2024-07	국채 현·선물 시장 단절 현상과 금리 변동성 증폭 메커니즘, 2024.2./송민기
2024-06	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관한 연구, 2024.1./김병덕
2024-05	상호금융의 정체성 확립 및 감독체계 개편 방향, 2024.1./구정환
2024-04	외부자금 조달제약이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기업혁신조사를 중심으로 -, 2024.1./임 진
2024-03	글로벌 거시·금융 충격과 해외 상업용부동산 투자 위험 분석 - 불균형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글로벌 CRE 시장 리스크 분석을 중심으로 -, 2024.1./신용상
2024-02	금융소비자보호와 동의명령 제도, 2024.1./이상재
2024-01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국제 비교 및 시사점, 2024.1./김우진
2023-12	민간 서민금융 이용자 분석과 정책서민금융예의 시사점, 2023.12./이수진·구정환
2023-11	최근 인플레이션 동학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2023.12./장 민
2023-10	금융분야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 2023.12./이정두
2023-09	보험회사의 ESG 경영이 위험 추구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3. 12./한상용
2023-08	은행 지점 접근성 하락이 기업의 레버리지 및 투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2023. 12./김석기

2023-07	증권펀드에 대한 고찰 : 사례 분석과 시사점, 2023.12./송민규
2023-06	해외의 금융회사 임원 적격성 심사제도와 시사점, 2023.11./이영경
2023-05	국내은행의 인적자원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23.6./김우진·구본성·이대기
2023-04	신용카드 부채 이용자 특성 분석 및 시사점, 2023.5./이수진
2023-03	국내은행의 예금 및 자산생산성: 예금시장 경쟁을 중심으로, 2023.4./권흥진
2023-02	기업 재무제약의 산업 침체 증폭 효과, 2023.3./이보미
2023-01	보험회사 경영진의 재임기간과 경영성과 간 관계 분석, 2023.1./이석호·한상용
2022-04	대형 베이지안 VAR 모형을 활용한 경제전망과 시나리오 분석, 2022.12./박춘성·박성욱
2022-03	통화정책 목표로서 고용안정의 유효성, 2022.12./장민
2022-02	국내 스팩(SPAC)의 성과 분석과 시사점, 2022.12./박해식·김남중
2022-01	한국의 경기변동회계 : 주요 경기침체 시기별 특징과 시사점, 2022.7./김현태·박춘성
2021-08	저성장·디지털 시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2021.12./김동환
2021-07	공매도와 주식시장의 이례현상, 2021.12./김근수·박해식
2021-06	외부충격 시 계열회사 부실화에 따른 그룹위험 연구 - 출자연계성을 중심으로, 2021.12./오탉록·이시연
2021-05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2021.12./송민규
2021-04	국내 보험사의 외화유가증권 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021.8./박해식·이석호
2021-03	팬데믹 하에서의 재정정책 효과: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 추정, 2021.8./권흥진·박춘성·오탉록
2021-02	공모·상장리츠 M&A 자금조달방식 결정요인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아태지역 상장 리츠 실증분석 -, 2021.2./신용상
2021-01	국내은행의 효율성과 시사점, 2021.1./이지연·이대기
2020-05	OECD 회원국 은행그룹의 PBR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20.8./권흥진·서병호
2020-04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생명보험사의 비용효율성 영향 분석 : Bootstrap DEA와 Stochastic Frontier Analysis를 중심으로, 2020.7./이석호
2020-03	투자자 정보, 기술적 분석 및 유전자 알고리즘(GA)에 기반한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관한 연구, 2020.6./김병덕
2020-02	거주자 외화예금과 외환시장 안정성, 2020.2./송치영·박해식
2020-01	국내 외환시장 개입의 유효성 검증 : 사건연구를 중심으로, 2020.1./박해식·김남중
2019-04	금융 마찰과 기업 규모별 정책, 2019.12./김석기
2019-03	가계대출 안내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 핵심상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11./김정한·노형식·서병호

2019-02	연령 프레임 효과로 인한 취업자 증감 지표의 착시 현상, 2019.7./송민기
2019-01	G-SIB CDS 프리미엄을 이용한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 측정, 2019.4./이금희·이명활
2018-07	자본시장을 통한 유동화 방식의 역모기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8.12./김영도·신용상
2018-06	방카슈랑스제도 시행의 종합적 효과 분석, 2018.11./이석호·이순호
2018-05	예대율 규제 of 거시건전성 효과와 시사점 :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018.8./김남중
2018-04	저축은행의 경쟁과 위험추구, 2018.8./연태훈
2018-03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가 외환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7./박성욱
2018-02	소비자의 대학진학 및 학자금대출 선택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 2018.4./김병덕
2018-01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동적특성 : 그룹별 대출 및 연체 추세에 대한 미시분석, 2018.3./박춘성·이보미
2017-17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 2017.12./박해식·이지연
2017-16	주택연금 시장참가자별 재무적 손익 분해와 고령화 관련 정책시사점 - 주택연금 시스템 지속성 확보 관련 시사점을 중심으로 -, 2017.8./신용상
2017-15	최근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저축은행 특성별 대출포트폴리오 분석 및 시사점, 2017.8./이수진·이규복
2017-14	기업집단의 출자·부채구조와 사업재편에 관한 연구, 2017.6./김동환
2017-13	증권업의 기술·비용·수익·이윤 효율성과 시사점, 2017.6./이지연
2017-12	자산가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2017.5./김영도
2017-11	금융실회환율과 대외포지션 및 자본유출입의 관계 분석, 2017.4./김소영·이윤석
2017-10	국내가구의 교육 및 주거관련 비용 부담이 노후소득 준비에 미치는 영향 :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2017.4./이규복·이석호
2017-09	Determinants of SME Growth : Korean Manufacturing Firms, 2017.3./박창균·임형준
2017-08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7.3./김병덕
2017-07	대중수출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전략 : 수입대체와 생산기지 이전 효과, 2017.2./지만수
2017-06	은행그룹의 비용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7.2./김우진·이대기
2017-05	Population Aging and Monetary Policy in a New-Keynesian OLG Model, 2017.2./김석기
2017-04	금융상품 자문업 도입에 따른 판매채널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2017.2./구정환·이규복
2017-03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목표, 2017.1./박종규
2017-02	금융지주회사의 비예금부채가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2017.1./김자봉·이규복
2017-01	미소금융의 효율성 분석과 상품 개선 방안 -원가금리 추정과 대출금리 현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2017.1./이대기

2016-04	주택자산의 금융상품화 방안 연구 -금융기관 인수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2016.11./ 신용상·김영도
2016-03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약세장 가설 재조명, 2016.11./박해식·송치영
2016-02	한국 자본이동관리규제의 영향 분석, 2016.2./박성욱·송민기
2016-01	국채만기에 관한 연구 : 기간스프레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2016.1./박종상·송민규
2015-04	평균 수명 증가가 연령별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 고령층을 중심으로, 2015.9./ 김석기·임진
2015-03	최근 기업부문 건전성 분석을 통한 금융 안정성 평가와 시사점, 2015.3./이지언
2015-02	기술력평가정보를 활용한 기술 중소기업 부도예측과 정책적 활용방안, 2015.2./ 박창균·임형준
2015-01	저성장·고령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2015.1./이석호
2014-05	국내 지역금융의 변화 추이와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2014.12./손상호·이재연
2014-04	국내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14.11./김우진
2014-03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분석 및 시사점, 2014.9./서병호
2014-02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2014.9./노형식· 임진
2014-01	금융소비자보호 효과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 규제, 사후관리, 역량강화, 2014.7./ 노형식·송민규·연태훈·임형준
2013-08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 임금(賃金)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2013.12./ 박종규
2013-07	방카슈랑스제도 시행에 따른 생명보험사의 비용절감(가격인하) 효과 : DEA 비용효 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2013.12./이석호
2013-06	금융업권간 자금이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2013.12./김영도·서병호
2013-05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국내시장의 영향, 2013.10./김영도
2013-04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국내 및 해외 포트폴리오투자 행태변화 및 시사점, 2013.9./ 박성욱·이규복
2013-03	정보기술의 발전과 주식시장 정보전달 속도, 2013.5./박재운·이충열·강임호·이선호
2013-02	주가지수 편입의 효과 : KOSPI 200을 중심으로, 2013.2./연태훈
2013-01	증권시장 수익률 및 변동성의 전이현상에 관한 연구, 2013.1./강종만
2012-05	우리나라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가 은행수익성 및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2012.8./한상섭·이병윤
2012-04	한국 금융시스템의 비교제도분석 : 은행 vs 시장, 2012.7./김동환
2012-03	최초공모주식의 저평가 여부와 장기성과의 변화 : 기업공개제도 개선효과에 주는 시사점, 2012.6./강종만
2012-02	회사채 유동성 프리미엄 분석 및 시사점, 2012.3./이규복·임형준
2012-01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의 역할 비교분석, 2012.2./김자봉·이석호
2011-05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방식과 외화유동성 위험, 2011.12./이병윤·이윤석

2011-04	캐리거래와 우리나라 외환시장, 2011.12./박해식·송민규
2011-03	스트레스테스트에 기초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 2011.8./신용상
2011-02	국내은행 업무 다변화의 성과분석, 2011.6./서병호·강종만
2011-01	해외주식투자 환해지에 대한 연구, 2011.1./임형준
2010-07	시스템 리스크를 감안한 추가 규제자본금의 추정에 관한 연구, 2010.12./김자봉·김병덕
2010-06	콜시장의 지준시장화에 따른 콜금리 움직임 분석, 2010.11./임형석
2010-05	금융불안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제 개선방안 연구, 2010.10./장 민·이규복
2010-04	기업부문 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에의 시사점, 2010.10./이지언
2010-03	외국인 국내채권 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2010.10./김정환·이대기
2010-02	은행업 위험변화가 자금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2010.10./강종만·김영도
2010-01	국내외 은행의 CDS프리미엄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10.10./서병호·이윤석

▶ KIF 분석보고서

2024-04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특성 및 위험인자 분석과 시사점, 2024.4./이석호
2024-03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과 시사점, 2024.2./이윤석
2024-02	한중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2024.2./지만수
2024-01	금융에서의 AI 확산에 내재한 잠재적 위험과 관리 방안의 모색, 2024.1./연태훈
2023-08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 평가 및 시사점, 2023.12./이수진·구정환
2023-07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 2023.12./서병호
2023-06	취약계층 및 청년층 채무조정 성공요인 분석, 2023.12./임형석
2023-05	지방은행은 필요한가? : 지방은행의 역할, 필요성, 정책과제, 2023.11./이병윤
2023-04	가계부채 리스크와 거시요인의 동태적 분석, 2023.10./이지언
2023-03	국내 비은행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방안, 2023.1./신용상
2023-02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2023.1./이규복
2023-01	위기시 정책대응과 국내 은행의 성과 비교 : 글로벌 금융위기 vs 코로나 19 위기, 2022.12./김영도
2022-08	한국경제의 복합위기 가능성과 금융안전망, 2022.12./김동환
2022-07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과 민간의 화폐발행, 2022.12./이명할
2022-06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의 개념과 추진방안, 2022.12./이병윤·이윤석
2022-05	정리계획과 자본규제의 연계성 제고 방안, 2022.12./구본성·김우진·이대기
2022-04	경기 전환점 예측 모형 개발, 2022.12./김석기
2022-03	탄소중립 정책의 국내은행 영향 및 대응방안, 2022.12./이병윤·이시연
2022-02	채무조정 실효율 분석과 시사점, 2022.12./임형석
2022-01	거시 충격에 대한 연체율 스트레스 테스트, 2022.10./이지언

▶ KIF VIP 리포트((구) KIF 금융분석리포트)

2021-06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2021.11./최흥식·구본성
2021-0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주요 내용 및 향후 강화 방향, 2021.5./구정한·이규복·오탈록
2021-04	2021년 은행산업 전망과 과제, 2021.3./구본성·권흥진·김우진·서병호
2021-03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 점검, 2021.3./구정한·이규복
2021-02	Big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요이슈와 정책적 논의, 2021.2./구본성
2021-0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21.2./김병덕
2020-18	우리나라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현황과 과제, 2020.12./장 민
2020-17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2020.12./이보미
2020-16	‘코로나 사태’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 2020.12./김동환·임형석
2020-15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 :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은행의 대응, 2020.11./이병윤·서병호·권흥진
2020-14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의 은행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발전방향, 2020.11./구본성·이대기
2020-13	글로벌 금융 불안과 우리나라 주가의 연계성, 2020.11./이명환
2020-12	코로나19와 글로벌 금융리스크 : 고위험·고수의 투자를 중심으로, 2020.10./박해식·김현태
2020-11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산업별 재무건전성 점검, 2020.9./이보미
2020-10	크레딧시장 내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와 금융시장 감독 관련 시사점, 2020.8./임형준
2020-09	주요국의 코로나19 위기 정책 대응 및 시사점, 2020.7./박성욱
2020-08	우리나라 금융시장 변동요인 분석, 2020.6./김남중·박성욱·박춘성
2020-07	제로금리 시대,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대응과제, 2020.5./송민규·구본성·구정한·박성욱·박춘성·이대기·이석호·임진
2020-06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2020.4./임 진
2020-05	국내 부동산신탁업의 구조와 발전과제, 2020.3./서정호
2020-04	사적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2020.2./구정한·이규복
2020-03	2020년 은행산업 전망과 과제, 2020.2./이대기·김우진·권흥진
2020-02	글로벌 교역 동향과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 2020.2./김정환
2020-01	일반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모·상장형 부동산 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공모형 리츠 및 부동산 DABS 거래소를 중심으로 -, 2020.1./신용상
2019-16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2019.12./장 민
2019-15	우리나라 지방은행의 발전방안, 2019.12./이병윤·이순호
2019-14	IPO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2019.12./이보미
2019-1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 해외의 주요 논의내용 및 시사점, 2019.12./이명환
2019-12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2019.11./박해식·이병윤
2019-11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10./김병덕

2019-10 금융거래지표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과제, 2019.9./김남중·송민규
 2019-09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 2019.6./장민
 2019-08 레버리지론 및 CLO 시장의 위험과 시사점, 2019.5./박해식·오택록
 2019-07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2019.3./서정호·이규복·이기혁
 2019-06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2019.3./서정호·김자봉
 2019-05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현황과 업권별 리스크 관리방안, 2019.2./신용상
 2019-04 지역중심 성장모델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과 시사점, 2019.2./구본성
 2019-03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부진 원인과 개선방안, 2019.2./구정환
 2019-02 자산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전략 분석, 2019.1./김병덕
 2019-01 국내 대출채권 유통시장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검토, 2019.1./김영도
 2018-08 오픈API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은행산업의 혁신전략, 2018.12./서정호
 2018-07 ICO 현황과 규제방안 -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 2018.11./이지연·이보미
 2018-06 글로벌 금융불안요인 점검, 2018.10./박해식·김남중·오택록
 2018-05 신남방정책과 국내은행의 아세안 진출, 2018.10./김정환·서병호
 2018-04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2018.9./박해식·이윤석
 2018-03 국내 증권사의 IB 업무현황 및 시사점 : 은행계열 IB 분석을 포함하여, 2018.8./구본성
 2018-02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가계부채 금리위험 완화 방안 : MBS와 커버드본드의 활용, 2018.8./김영도
 2018-01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 차별성과 사회적 역할 제고, 2018.7./구본성
 2015-01 글로벌 100대 은행의 성과분석 및 시사점, 2015.4./김우진·이수진
 2014-13 중국 은행시장의 지역별 특성과 진출환경, 2014.12./지만수
 2014-12 영국 서민지원 주택금융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2014.9./강종만
 2014-11 비트코인 거래 메커니즘의 분석과 시사점, 2014.9./김자봉
 2014-10 위안화 직거래 체제 구축방안, 2014.8./박성욱·지만수·송민기
 2014-09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2014.8./김우진
 2014-08 G-SIBs 규제 영향과 시사점, 2014.7./임형석
 2014-07 RP 시장 선진화를 통한 단기자금시장 구조개선 지원방안, 2014.6./김영도
 2014-06 거시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해외채권투자의 활성화, 2014.5./구본성·임형준
 2014-05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2014.4./노형식·이순호
 2014-04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2014.4./이지연·최공필
 2014-03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고찰, 2014.3./박성욱·박종상
 2014-02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배경과 전망, 2014.2./박성욱·송민기
 2014-01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통합필요성 및 유인부합적 시행방안, 2014.1./김병덕
 2013-10 일본의 고령화 대책, 2013.11./김동환
 2013-09 금융거래세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2013.7./김정환·박성욱·박종상
 2013-08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를 중심으로, 2013.7./이명환

2013-07 노르딕 모델이 갖는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2013.5./서정호·구본성

2013-06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소득·자산 구조와 시사점, 2013.5./박해식·임 진

2013-05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투자자 보호 강화, 2013.4./송민규·임형준

2013-04 ETF 관련 주요 이슈 및 발전 방향, 2013.4./김영도·송민규·연태훈·임형준

2013-03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기반, 2013.3./김영도·임 진

2013-02 유럽 재정위기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2013.1./구본성·김정환·이명환·노형식·임 진

2013-01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의 부작용 점검 : 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2013.1./박해식·박성욱

2012-09 국내은행의 PB 비즈니스 발전방안, 2012.12./서병호·김우진

2012-08 학자금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2012.7./강종만

2012-07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2012.7./박해식·박성욱

2012-06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2012.5./이윤석

2012-05 신용상당기능의 활성화방안, 2012.3./서정호

2012-04 우리나라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2012.3./김우진·서병호

2012-03 차잉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할 강화방안, 2012.2./박성욱·박재하

2012-02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2012.1./김영도

2012-01 외국인 채권 매수·매도의 비대칭적 결정 요인, 2012.1./김영도·임형준

2011-26 ATS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방향, 2011.12./송민규·연태훈

2011-25 연기금 자산운용관련 개선방안, 2011.12./김병덕

2011-24 최근 인플레이션의 특징 및 시사점-지속성 및 변동성을 중심으로, 2011.12./이규복·임형석

2011-23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분석 : 미국 서브프라임발 위기와와의 비교, 2011.12./이명환 외

2011-22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1.11./강종만

2011-21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와 연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2011.11./김영도

2011-20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2011.10./김동환

2011-19 한국·호주의 은행산업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1.10./서병호

2011-18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 요인 분석, 2011.9./박성욱·장 민

2011-17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011.8./이지연·연태훈·김영도·송민규·임형준

2011-16 최근 장기금리 하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1.8./김정환·장 민·이규복

2011-15 외환규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 2011.7./김정환·박성욱

2011-14 비우량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 2011.7./이지연·임형준

2011-13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기간부예금) 평가 및 개선방안, 2011.7./임형석

2011-12 바은행 금융회사 금리 결정요인 분석 :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2011.7./이규복·이순호

2011-11 주택금융제도의 국제간 비교 및 정책 제언, 2011.7./이재연

2011-10	국내은행의 외환부문 리스크 연계구조에 대한 분석, 2011.7./박성욱·송민규
2011-09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방안, 2011.7./이시연
2011-08	해외주식투자 활성화 방안, 2011.6./이지연 외
2011-07	증권대차시장의 발전방안, 2011.6./김영도
2011-06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외환업무 관련 효율화 방안, 2011.5./노형식 외
2011-05	개정 신탁법(안)이 은행 신탁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1.4./김병연·서정호
2011-0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2011.4./강종만
2011-03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제공의 개선방향 : 비교공시를 중심으로, 2011.4./송민규
2011-02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2011.3./김병덕 외
2011-01	금융안정분담금(은행세) 도입과 정책방향, 2011.3./박성욱 외
2010-16	국내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2010.12./서정호
2010-15	서민금융정책의 방향, 2010.11./정찬우
2010-14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10.10./이재연
2010-13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군별 인사관리시스템의 개선 : 우리나라 은행을 중심으로, 2010.10./노형식
2010-12	최근 달러 캐리거래의 동향과 시사점, 2010.9./김정환·이윤석
2010-11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 2010.8./장민·이규복
2010-10	향후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2010.8./장민·이규복·임형석
2010-09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2010.8./이지연·임형준
2010-08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감독방안, 2010.8./손상호·이상제
2010-07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영향과 정책대응, 2010.6./김정환·임형준·이지연
2010-06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0.5./서병호
2010-05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2010.5./김동환·정찬우·이재연
2010-04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2010.4./장민·이규복
2010-03	외화표시 국내채권 CDS시장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2010.4./서병호·이윤석
2010-02	예대율 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4./이지연·김영도
2010-01	녹색금융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0.2./구정환

▶ KIF Working Paper

25-05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를 사용한 한국 외환시장 동향 및 특성 분석, 2025.2./강태수·김경훈
25-04	라쏘 방법론을 이용한 국내은행 수익성 예측을 위한 변인 선별 분석, 2025.1./이진
25-03	EU Digital Markets Act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 규제 시도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 2025.1./전주용

- 25-02 자영업자 종사 사업 현황, 문제점과 대응방안, 2025,1./전병욱
- 25-01 개인발달계좌 도입의 경제적 효과, 2025,1./한종석
- 24-06 금융보안 정책의 국제 비교 및 대응 방안, 2024,11./고동욱
- 24-05 금융권의 이자율위험관리활동 및 동적위험회피 회계처리 제안(안), 2024,11./권용우·배현재·조준서·문해원·오슬기
- 24-04 인플레이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2024,11./남상욱
- 24-03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현황, 평가분석 및 향후과제, 2024,11./강종구·류상철·안희욱·이중식
- 24-02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현대적 재조명, 2024,02./김광수·김영식·김자봉·김진영·류덕현·이명현·주병기
- 24-01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 생태계 활성화 방안, 2024,01./강경훈
- 23-15 부동산 가격 변동과 경제불평등과의 관계 -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중심으로, 2023,11./박정재·이승훈
- 23-14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 - 은행업을 중심으로 -, 2023,1./이충열
- 23-13 은행대리업(Bank Agency) 제도와 규제법적 쟁점, 2023,11./고동원
- 23-12 인플레이션 추세의 구조적 변화와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2023,11./이찬우
- 23-11 전략적 경쟁 시대 국제투자통화 구성의 변화와 시사점, 2023,11./박복영·안지연
- 23-10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환해지 행태 및 환해지규제, 2023,11./임준환
- 23-09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대북경제정책 추진방향, 2023,10./조동호
- 23-08 Create Your Own Valuation, 2023,7./MINMO GAHNG
- 23-07 Attention to Detail : Learning About Mergers, 2023,7./Adam L. Aiken·Choonsik Lee
- 23-06 The Sensitivity of Cash Savings to the Cost of Capital, 2023,7./Viral V. Acharya·Soku Byoun·Zhaoxia Xu
- 23-05 Tax Cuts, Firm Growth, and Worker Earnings : Evidence from Small Businesses in Canada, 2023,7./Yige Duan·Terry S. Moon
- 23-04 Artificial Intelligence, Jobs, and Performance in Banking, 2023,7./Ye Ji Kee·Yong Suk Lee
- 23-03 Designing Agile Banking Supervision, 2023,7./Jeong Ho (John) Kim·Kyungmin Kim·Victoria Liu·Noam Tanner
- 23-02 외환건전성 정책의 효과 분석, 2023,1./지인엽
- 23-01 머신러닝과 비재무적 정보를 이용한 부실 확률 예측 모형: 탄소배출정보, ESG 성과, 애널리스트 정보를 중심으로, 2023,1./이정환·조진형
- 22-25 지역금융 현황 및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시사점: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22,12./남재현
- 22-24 사적 채무조정업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2022,12./한재준
- 22-23 거시 충격이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2022,12./석병훈·유혜미

22-22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2022,12./조두연
22-21	탈중앙화금융(DeFi)의 현황과 법제 정비 방향, 2022,11./고동원
22-20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법 현대화 : 해외사례 및 시사점, 2022,11./안수현·정대·이지은·노은영·강영기
22-19	대외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유출입 및 환율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 2022,10./심명규·조수진
22-18	주택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주택시장 정책효과 분석, 2022,9./허석균
22-17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금융의 역할 재조정, 2022,9./이기영·심명화
22-16	NFT 및 메타버스 (Metaverse) 동향 및 금융업에 대한 시사점, 2022,8./강형구
22-15	Outside Directors' Insider Trading Around Board Meetings, 2022,7./Seil Kim·Seungjoon Oh
22-14	Liquidity Spillovers: Evidence from Two-Step Spinoffs, 2022,7./Yakov Amihud·Sahn-Wook Huh·Avanidhar Subrahmanyam
22-13	The Effect of ESG-motivated Turnover on Firm Financial Risk, 2022,7./Daewoung Choi·Yong Kyu Gam·Min Jung Kang·Hojong Shin
22-12	Corporate-Sovereign Debt Nexus and Externalities, 2022,7./Jun Hee Kwak
22-11	Survival of the Un-fittest: A Distribution-to-Distribution Analysis of Pre-Crisis Bank Risk Buildup, 2022,7./Yong-Cheol Kim·Gabjin Oh
22-10	Time-varying Arbitrage Efficacy, 2022,7./Jingzhi Chen·Yongcheol Shin·Huamao Wang
22-09	Corporate Acquisitions, Profitability, and Markup: Evidence from Europe, 2022,7./David Arnold·Terry S. Moon·Amirhossein Tavakoli
22-08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2022,4./하준경
22-07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Federal Reserve's New Monetary Policy Framework, 2022,4./Andrew T. Levin·Arunima Sinha·Sinem Sonmez
22-06	Insurance in a Digital World: Are Cyber Risks Insurable?, 2022,4./Martin Eling
22-05	역동적 혁신경제를 위한 녹색금융 추진방안, 2022,4./박재하·임대웅
22-04	최근 산업별 재무안정성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022,4./서은숙·황상현·이상호
22-03	The Role of Regional Banks in SME Financing in Japan: Expanding Their Rol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2022,2./Nobuyoshi Yamori
22-02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2022,2./김우철
22-01	북한 사금융 실태와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 2022,2./조동호·김은숙·전경주
21-19	은행 대손충당금 적시 인식에 따른 영향분석 2021.12./전병욱

- 21-18 주식프리미엄(equity premium)의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2021.12./김현학
- 21-17 정보경제학 관점에서 본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중개)의 시스템 리스크와
거시건전성 관리 방향, 2021.11./강경훈
- 21-16 Robust and Resilient Finance, 2021.7./John Kay
- 21-15 Bank Regulation in the Age of the Platform Economy, 2021.7./Barry
Eichengreen
- 21-14 Innovation Intensity and Asset Prices, 2021.6./Seunghyup Lee
- 21-13 SPACs, 2021.6./Minmo Gahng·Jay R. Ritter·Donghang Zhang
- 21-12 It's Not Who You Know – It's Who Knows You: Employee Social Capital
and Firm Performance, 2021.6./DuckKi Cho·Lyungmae Choi·Michael
Hertzel·Jessie Jiaxu Wang
- 21-11 Redistribution and the Monetary-Fiscal Policy Mix, 2021.6./Saroj Bhattarai·
Jae Won Lee·Choongryul Yang
- 21-10 Central Bank Policy and the Concentration of Risk: Empirical Estimates,
2021.6./Nuno Coimbra·Daisoon Kim·Hélène Rey
- 21-09 Optimal Bailouts in Banking and Sovereign Crises, 2021.6./Sewon Hur·César
Sosa-Padilla·Zeynep Yom
- 21-08 Digitalization of Finance in Korea, 2021.5./Taiki Lee·Yong Tae Kim·
Thorsten Beck·Yung Chul Park
- 21-07 Cryptocurrency Regulation and Enforcement in the U.S. and Europe,
2021.3./Demelza Hays·Andrei Kirilenko
- 21-06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적립방식 연금 활용 방안, 2021.2./
박종상
- 21-05 Digital Technology and Financial Innovation: A Literature Survey, 2021.2./
Thorsten Beck
- 21-04 Market Structure, Regulation and the Fintech Revolution, 2021.2./Antonio
Fatas
- 21-03 Inner Workings of Collateral-based Stablecoins and Its Implications,
2021.2./Gongpil Choi
- 21-02 Cross-border Collateral Constraints in Asia and Its Implications, 2021.2./
Gongpil Choi
- 21-01 Toward a Central Bank Collateral Framework for ABMI, 2021.2./Gongpil
Choi
- 20-04 금융기관의 조직 내 상시적 혁신을 위한 인사조직 개선방안, 2020.12./김경민·
김승현
- 20-03 국내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 한국, 선진국(G7), 신흥시장국(BRICs)에 대한
비교 연구, 2020.12./장원창
- 20-02 Finance and Technology: What is changing and what is not, 2020.9./
Stephen G. Cecchetti·Kermit L. Schoenholtz

20-01	남북 경제협력 재추진시 금융관련 법제도적 이슈와 개선방향, 2020.1./이윤석·남오연
19-09	국내외 사회적 책임투자 사례 분석과 시사점, 2019.12./여은정
19-08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넛지(nudge) 도입 방안, 2019.12./박나영
19-07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차별과 공정성에 대한 검토, 2019.12./한재준
19-06	국내 자본시장에서 PEF의 역할과 발전방향, 2019.11./이준서
19-05	Network effects of multiple banking relationships on systemic risks, 2019.11./서상원
19-04	CROSS-BORDER ASSET PLEDGEABILITY FOR ENHANCED FINANCIAL STABILITY, 2019.9./최공필
19-03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2019.5./박창균
19-02	부동산의 공유자산을 통한 임대안정방안, 2019.1./이상영·최명섭
19-01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발전방안, 2019.1./오세경
18-05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DSGE 모형과 한국경제의 파라미터 추정에 관한 연구, 2018.12./남덕우·이정환
18-04	도시재생사업의 부동산 개발금융 활용방안, 2018.11./고성수·김준형·강원진
18-03	Reconnecting the Dots : Expanding Asian Financial Network for the PSD2, 2018.8./최공필
18-02	균형거시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주택가격 및 임차료 변동 요인 분석, 2018.5./박춘성·송 준·홍재화
18-01	집합투자기금 투자증대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연구, 2018.1./조형태
17-09	News Media Sentiment and Asset Prices: Text-mining approach, 2017.12./표동진·김정호
17-08	빅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기업 부도예측 연구, 2017.12./오세경·최정원·장재원
17-07	대학생 대출 특성 및 제도 개선방안, 2017.12./이준서
17-06	Digital Single Market and the Global Financial Stability, 2017.12./최공필
17-05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in Small-value Cross-border Remittances and its Implication, 2017.4./최공필
17-04	Economic Fluctuations and Banking Sector: a Unified Analysis with a Financial Sector Augmented DSGE model, 2017.4./심명규·김석기·박춘성
17-03	벤처캐피탈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 방안, 2017.2./한재준
17-02	각국의 채권추심 현황 및 시사점, 2017.1./박창균
17-01	내생적 통화공급과 통화정책의 효과, 2017.1./채희율
16-02	Fintech as a Catalyst for Financial Inclusion, 2016.10./최공필
16-01	저성장기 일본은행의 경험과 시사점, 2016.2./양원근
15-17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연구, 2015.11./조영기
15-16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2015.11./조준모·우광호
15-15	거시건전성 감독과 신용정보, 2015.10./이인호·김영도·송연호·이준서·정재만

- 15-14 시장개방과 외국인증권투자, 2015.9./장원창
- 15-13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심리 변인과 외재적 정보의 인지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 2015.9./변상호
- 15-12 세계금융위기이후 금융부문에 대한 시각 및 금융감독규제의 변화, 2015.8./조윤제
- 15-11 한국투자자 관점의 국제분산투자, 2015.8./정재만
- 15-10 한국자본시장의 차익거래 특성과 차익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 증권거래세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2015.8./박종원·이인호
- 15-09 한국의 기술혁신 지원 금융정책과 벤처금융산업, 2015.8./이인호
- 15-08 Real-financial Linkages and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 Financial Social Accounting Approach, 2015.6./표학길·송새람
- 15-07 유형별 자본이동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2015.6./김흥기
- 15-06 종가단일가에 기초한 파생상품 정산과 시세조종 유인에 대한 고찰, 2015.6./윤선중
- 15-05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2015.5./한재명
- 15-04 원-위안화 직거래시대의 한-중 금융협력방안, 2015.4./서봉교·정영록
- 15-03 스톡옵션 행사시 내부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는가?, 2015.4./김선호
- 15-0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소득계층별 가계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차이 분석, 2015.3./임병인
- 15-01 On the Determinants of Surges and Stops in Foreign Loa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2015.1./백승관·송치영
- 14-16 A Regional Repo Market Initiative for Global Financial Stability, 2014.12./최공필
- 14-15 융합적 사회적경제와 SHC : 사회적경제와 주류경제의 융합, 2014.10./김대영·심상달·장원석
- 14-14 Competitive Search Equilibrium in the Credit Market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and Limited Commitment, 2014.10./송재은
- 14-13 연기금투자물 액티브 주식형펀드의 성과와 그 결정요인 : 공모 액티브 주식형 펀드와의 비교 분석, 2014.9./이성호
- 14-12 기업내부의 사적이득 편취유인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14.9./위경우·이재현·정현재
- 14-11 기업 지배구조 및 투자유형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7./이장우·노희진
- 14-10 자본이득 과세에 관한 연구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중심으로, 2014.6./김정식
- 14-09 고령화가 가계부문 금융행태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패널을 이용한 분석, 2014.6./김경수·유경원
- 14-08 은행 예대금리의 결정요인 : 시장금리의 은행금리 전가에 관한 실증분석, 2014.6./김상환·노형식

- 14-07 글로벌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가 유럽 및 신흥국 국제시장에 미친 영향과 한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2014.6./김동순
- 14-06 고객 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 연구, 2014.5./이건범·김우진
- 14-05 펀드 이용료와 쌍방외부성, 2014.5./민세진·이경원
- 14-04 신 글로벌 통화전쟁의 가능성과 정책대응 방향, 2014.4./오정근
- 14-03 금융권간 융합과 경쟁에 대한 연구, 2014.4./강경훈·여은정
- 14-02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2014.3./채희울
- 14-01 Growing Global Needs for ACU-Dominated Reserve Assets, 2014.3./최공필
- 13-15 IT기술발전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전략, 2013.12./김준호
- 13-14 공통화폐단위(CCU) 활용을 통한 역내화폐의 국제화 전략, 2013.12./최공필·김정한
- 13-13 발행수익률 자료를 이용한 한국이자율 기간구조 추정, 2013.10./김성만·김동석
- 13-12 북한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 2013.10./윤덕룡
- 13-11 가계부채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요인 점검, 2013.10./유경원
- 13-10 ELW시장의 투자자 매매패턴 및 성과분석, 2013.9./최영수
- 13-09 The Effect of IFRS on Loan Loss Provision and Loan Origination Pro-cyclicality: Evidence from European Banks, 2013.9./Lee Seok Hwang·Young Jun Kim
- 13-08 Korean Financial Sector in the Post-Crisis Era: Vision and Policy Issues, 2013.8./Suk Heun Yoon
- 13-07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등급인플레이션 문제와 정책과제, 2013.8./강경훈·한재준
- 13-06 은행업 분야의 전문규제와 경쟁정책의 조화에 관한 연구, 2013.6./정호열·송석은·안현중
- 13-05 신규공모시장에서 수요예측제도의 역할에 대한 연구, 2013.4./신인석·이관영
- 13-04 새로운 금융환경하의 은행의 구조와 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2013.4./송옥렬
- 13-03 부동산 관련 금융위기의 특징과 정책 대응, 2013.4./박원암
- 13-02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역모기지 활용에 관한 연구, 2013.4./함상문·고성수
- 13-01 은행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2013.1./이기영·남재현
- 12-14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소고, 2012.12./이철환
- 12-13 우리나라 금융권 수신의 단기화 요인 및 개선방안, 2012.9./최창규
- 12-12 장내 파생상품거래의 규율체계 정비 및 방향, 2012.8./정기웅
- 12-11 Governance and the Eurozone Crisis: What lessons to East Asian Integration?, 2012.7./Seung-Gwan Baek·Yonghyup Oh
- 12-10 Cross-Border Bond investment,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and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2012.6./Park Daekeun
- 12-09 보험소비자 금융정보 현황과 과제, 2012.6./지범하·이경주·최현자

- 12-08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효과에 관한 연구 : Chop-shop 접근법을 중심으로, 2012.6./박정수·서정호
- 12-07 한국경제의 통화수요, 통화정책 및 환율결정 : 공적분 VAR모형에 의한 분석, 2012.6./주한광
- 12-06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 주요국의 대응사례와 시사점, 2012.5./이인호 외
- 12-05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제자본흐름의 특징과 전망 : 신흥국관련 자본이동을 중심으로, 2012.5./강삼모
- 12-04 유럽재정위기의 요인과 대응방안, 2012.5./문우식
- 12-03 헤지펀드의 도입 및 규제방안, 2012.4./이호진
- 12-02 경제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 2012.3./백웅기
- 12-01 Regulation for CB-IB Co-evolution-Establishing Sound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in the context of vertical/horizontal integration theory-, 2012.1./Dong-Hwan Kim
- 11-18 외국인 자본유출입 특징과 국내 금융시장의 파급효과, 2011.12./정재식
- 11-17 The Impact of Mandatory IFRS Adoption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An Empirical Analysis of European Banks, 2011.12./Lee-Seok Hwang ·Jeong Ho Suh ·Sang-Giun Yim
- 11-16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의 동태적 연관성, 2011.12./한상섭
- 11-15 내수 진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 대 중소기업간 위험공유를 중심으로, 2011.12./하준경 외
- 11-14 리스크를 고려한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2011.12./함준호
- 11-13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주식 소유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11.10./전성인
- 11-12 산은 민영화 관련 주요 이슈, 2011.10./윤석현
- 11-11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2011.9./남재현
- 11-10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1.9./장동구
- 11-09 국내 부동산가격변동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1.5./고성수
- 11-08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환율, 순수출 및 경제성장간의 상호관계 비교연구 : 시계열 및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 2011.5./송유철·원용걸
- 11-07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2011.5./이기영
- 11-06 The Roles of Financial and Monetary Stabilities for Fiscal Soundness, 2011.5./Man-Woo Lee·Junggun Oh·Dong Heon Kim
- 11-05 이슬람 금융의 도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011.5./김종관·이승영
- 11-04 On the Determinants of Aggregate Currency Mismatch, 2011.5./Seung-Gwan Baek
- 11-03 원/달러 변동성 증대의 결정요인 분석, 2011.4./성태운
- 11-02 녹색금융의 자본조달론-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의 활성화, 2011.3./전용일 외

- 11-01 최근 EMU의 체제위기 분석과 향후 전망, 2011.3./박성훈
- 10-14 금융위기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2010.12./하준경
- 10-13 Constructing an Enhanced Global Financial Safety Net: IMF as a Global Central Bank, 2010.11./Gongpil Choi
- 10-12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금융중심지에 대한 함의, 2010.9./송치영·박해식
- 10-11 The Dollar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Crisis and Reforms, 2010.9./Jai-won Ryou, Shinji Tokagi
- 10-10 금융그룹에서 법인격과 자기자본규제의 의미, 2010.9./송옥렬
- 10-09 최근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논의, 2010.8./박영석
- 10-08 차이나머니의 해외투자 향방과 시사점, 2010.7./김경엽
- 10-07 국내 투자은행(IB)의 리스크관리 방안 연구, 2010.7./김진호
- 10-06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2010.7./이종욱
- 10-05 자본이동의 반전과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 2010.7./김정식
- 10-04 금융투자업 종사자 보수체계의 비대칭성과 투자쏠림현상, 2010.6./강경훈 외
- 10-03 재정정책의 변화가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패널분석, 2010.6./박완규 외
- 10-02 시스템리스크와 금융정책과제, 2010.5./채희율
- 10-01 가격경직성과 금융시장마찰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 효과 분석, 2010.4./정용승

▶ 기타보고서

- 25-03 Alternative Credit Scoring Regulatory Framework: Comparis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2025.4./Sanjung Purnama Budiarjo·Chun Sung Jun
- 25-02 Leveraging South Korea's Strategic Approach: Developing a Robust NPL Resolution Framework for Indonesia, 2025.4./F. Ziesco Yoga Sulistyο·Lee Kang San
- 25-01 청년금융정책의 이해, 2025.3./김동환
- 22-05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 중장기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 2022.7./손상호
- 22-04 국내은행의 플랫폼 전략: 현황과 전망, 2022.7./구본성·이대기
- 22-03 Prospects of the Global Economy after Covid-19, 2022.4./Thorsten Beck·Yung Chul Park
- 22-02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조망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2022.3./KIF
- 22-01 금융혁신 8대 과제 : 규제·감독, 빅테크, 가상자산, CBDC, 가계부채, 녹색금융 등, 2022.2./손상호
- 21-02 Fostering Fintech for Financi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2021.8./ Thorsten Beck·Yung Chul Park

21-01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2021.2./김자봉
20-01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2020.12./정운영·박원주·황삼진
19-05	2020년 경제 및 금융 전망, 2019.12./KIF
19-04	일본 기능별·횡단적 규제체계의 <중간정리>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019.7./김자봉·노형식
19-03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의 역할, 2019.4./안데스 외
19-02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2019.1./함유근·이종석
19-01	2019년 경제 및 금융 전망, 2019.1./KIF
18-03	생산자동화 및 기술발전이 금융산업 고용 및 임금구조에 미친 영향 : 미국의 사례(1980년과 2007년 비교), 2018.12./심명규·양희승
18-02	ICO의 이해, 2018.12./홍기훈
18-01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2018.2./임 진·김영도·박종상·박춘성
17-01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2017.1./신용상·이상영·이수옥·이태리 외
16-04	국내 미술금융 활성화 전략 및 활용방안, 2016.12./홍기훈
16-03	2015년 하반기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상황, 2016.11./김석기
16-02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이해 -금융사고와 범죄 방지 및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2016.6./이충열·정군오
16-01	금융생활과 수학, 2016.4./권오남·김자봉·김정환
13-01	2013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 보고서, 2013.11./장민 외
11-01	KIF금융상황지수, 2011.6/박성욱 외

▶ KIF 이슈리포트

2025-03	그린핀테크(Green FinTech)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2025.4./서정호
2025-02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규제 및 시사점: 사업자 분류 및 관련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2025.4/서병호·이정두·오테록·홍용기
2025-01	인구변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안, 2025.1./서정호
2024-07	최근 금융사기 현황과 대응과제, 2024.12./이윤석
2024-06	지방소멸과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 2024.12./이병윤
2024-05	금융플랫폼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규제 이슈, 2024.12./이정두
2024-04	미국의 2차 제재 (Secondary Boycott)가 한국 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24.12./이대기
2024-03	금융 마이데이터 2.0 시대 국내 금융회사의 과제, 2024.11./서병호
2024-02	브릭스의 확대와 글로벌 사우스, 2024.9./김정환
2024-01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24.9./이수진·권홍진·이병윤

종간

▷ KIF 금융분석보고서

- 2022-05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비대칭적 반응 분석과 시사점, 2022.3./구본성·김우진·이대기
- 2022-04 M&A 전후 저축은행 영업행태 변화 연구 - 2016~2017년 사례를 중심으로, 2022.3./구정환·오탉록·이규복
- 2022-03 은행의 대출 증가와 추가수익률 : 우리나라 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2022.2./김영도
- 2022-02 수출 급변동 조기예측모형 :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2022.1./송민기
- 2022-01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현황과 개선과제, 2022.1./김재현·이석호
- 2021-07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과 중국의 제조업 공급망, 2021.12./김정환
- 2021-06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과 기업성장, 2021.12./이병윤·권홍진
- 2021-05 지속가능한 가맹점수수료 체계 기반마련 연구, 2021.12./구정환·이규복
- 2021-04 신용평가산업 규제 역사와 경쟁정책 개선방안, 2021.12./임형준
- 2021-03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2021.11./이지언
- 2021-02 기업의 법적 형태가 부도위험과 기업형성에 미치는 영향 -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 2021.10./김석기
- 2021-01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 2021.7./장 민·박성욱
- 2020-01 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미시구조 비교 분석 - 과다채무자를 중심으로 -, 2020.2./임 진
- 2019-03 국내은행의 핵심예금 결정요인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2019.12./김우진·이대기
- 2019-02 증권규제 비례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증권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민사적 금전제재(과징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2019.9./김자봉
- 2019-01 기업부채 리스크와 은행대출 건전성 -Merton 모델을 중심으로-, 2019.6./이지언
- 2018-01 은행 비예금부채의 부채 사이클 조정역할, 2018.9./김자봉·박양수·조태근
- 2016-04 우리나라 은행의 시장경쟁도 평가 및 정책점 시사점, 2016.8./서정호
- 2016-03 국내 서민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 수요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16.8./구정환·이규복·김석기
- 2016-02 금융자본계열과 산업자본계열 보험시간 경영성과 비교·분석, 2016.3./이석호
- 2016-01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와 시사점 :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2016.2./김우진·이순호
- 2015-01 국내은행의 점포수 변화와 변동요인 분석, 2015.10./이윤석

▷ KIF 정책분석보고서

2022-02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향후 과제, 2022.2./김영도
2022-01	금융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정책과제, 2022.2./서정호
2021-05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연구, 2021.12./신용상
2021-0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국경간 거래, 2021.12./이명활
2021-03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 2021.12./이병윤·서정호
2021-02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시사점, 2021.12./김남중·김현태·박해식
2021-01	코로나19가 소득분위별 체감물가상승률에 미친 영향, 2021.7./박성욱·장 민
2016-03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2016.8./손상호
2016-02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이해-워크아웃과 법정관리-, 2016.5./김동환·이순호·구정한·김석기
2016-01	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6.5./김자봉
2015-07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국제논의와 국내도입 시 고려요인 분석, 2015.11./임형석·이재연
2015-06	국내 기술금융의 과제와 개선방안, 2015.9./손상호
2015-05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책대응방향, 2015.9./박종규
2015-04	국내 「금융회사 정리체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2015.9./임형석·고영호
2015-03	국내 주택시장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탈동조화 현상과 정책시사점, 2015.4./신용상
2015-02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와 효과 분석, 2015.3./구정한·김영도·이시연
2015-01	협동조합은행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상업은행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5.2./김자봉
2014-05	인구고령화 및 금리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9./강종만
2014-04	낙수효과(落水效果)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가계소득 중대 3대 패키지」의 쟁점과 대안, 2014.9./박종규
2014-03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국제논의와 시사점, 2014.8./임형석
2014-02	은행의 금융중개기능과 금융통제(Financial Restraint)에 관한 연구, 2014.7./김동환
2014-01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방향 및 과제, 2014.6./손상호·김영도
2013-06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2013.12./손상호
2013-05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방안, 2013.11./이재연·이시연
2013-04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성과 및 부실채권시장의 향후 발전 과제, 2013.6./KIF
2013-03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2013.6./이석호
2013-02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관참은가?, 2013.4./KIF
2013-01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2013.3./손상호·이재연
2011-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2011.9./이시연·구본성
2011-02	금융그룹의 통합리스크 관리, 2011.7./이명활
2011-01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2011.1./구정한·이시연
2010-01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2010.10./이석호·구정한

▷ KIF 금융조사리포트

- 2021-02 새로운 지급수단 출현과 결제방식의 변화가 국제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2021.3./김정환·이윤석
- 2021-01 국내외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2021.3./이시연
- 2020-01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영향과 시사점 : 아마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2020.10./김자봉·이대기
- 2019-01 베트남의 금융개혁과 금융시스템 현황 및 시사점, 2019.12./이병윤·박해식
- 2016-01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에 대한 해외 연구 및 사례, 2016.11./김정환

▷ KIF 금융리포트

-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2018.3./이수진
- 국내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 방향성에 관한 연구 -KPI 개선을 중심으로-, 2018.2./김우진·이대기
-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 2017.12./김자봉·김정환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환경의 변화와 국내 금융사의 대응 과제, 2017.7./지만수·이윤석
- 금융권 미청구자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2017.3./이순호·이재연
-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동향과 과제 -바람직한 금융규제 체계의 모색-, 2017.1./김동환
-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2016.10./서병호·이수진·이윤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경변화와 국내 증권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5.12./강종만
-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 및 과제 -지분형 부동산증권화 및 NPL시장 등을 중심으로. 2015.9./김동환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평가와 시사점, 2015.6./김우진
- 2014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구조변화 : 주간금융브리프(국제금융이슈컬렉션) 2014, 2015.01./ KIF
- 북한 은행시스템의 변화와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 통일금융예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4.12./안형익·박해식
- 한국금융산업발전사(1990~2010년을 중심으로), 2014.12./KIF
- 한국 통화정책의 유효성 연구, 2014.6./강명현·이혜란
- 금융지주회사의 CEO 리스크와 지배구조 개선방안, 2013.11./김동원·노형식
- 금융기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3.8./이순호
- 중소기업금융의 발전과제, 2013.6./손상호·김동환
-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 향후 과제-단기지표금리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2013.3./김영도
- 가계부채 백서, 2013.3./KIF

※ 홈페이지(www.kif.re.kr)를 참조하시면, 한국금융연구원의 모든 발간물을 보다 상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 정 호

(徐 禎 浩)

약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텍사스공과대학교 (경영학 석 박사)
- 하나은행 부행장
-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현)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주요 논문

- 「인구변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안」, KIF 이슈리포트, 한국금융연구원, 2025-01, 2025
- 「금융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정책과제」, KIF 정책분석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22-01, 2022
-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공저), KIF 정책분석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21-03, 2021
-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은행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공저), KIF 연구총서, 2020-02, 2020

KIF 이슈리포트 2025-03

그린핀테크(Green FinTech)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인 쇄 2025년 4월 10일

발 행 2025년 4월 15일

발행인 이항용

발행처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5-6·7·8층
전 화 : 02-3705-6300 FAX : 02-3705-6309
<http://www.kif.re.kr> ; webmaster@kif.re.kr
등록 제1-1838(1995. 1. 28)

© 한국금융연구원 2025

※ 보고서의 연구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